

2018-CR-01-03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8-03

이주 고려인의 서울 정착을 위한 대책

김병혁



**이주 고려인의 서울
정착을 위한 대책**

\ 연구책임

김병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 연구진

김우경 구의중학교 교장
남궁원 대영고등학교 수석교사
강성주 월계중학교 교감
박민역 장충고등학교 교사
조미영 풍문고등학교 교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한국어능력 함양 지원·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국내이주 고려인, 안정적 정착 적극 도와야

중양포 국가 경제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 고려인 급증

2018년 9월 현재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연방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5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8만 1천 명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 10만 9천여 명의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의 수는 30만 명을 넘는다.¹⁾ 이들은 2014년 현재 방문취업(H-2) 14,185명, 재외동포(F-4) 9,384명, 영주권 약 391명, 방문 동거(F1) 461명 그리고 학생 비자 또는 단기 체류자 기타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²⁾

고려인의 한국 내 거주지는 주로 경기도 안산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북 청주시, 경북 경주시, 경남 김해시 등이며, 그들은 공단이 밀집한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다. 그런데 고려인 후세 중에는 중도입학한 학생들이 급증하고, 이 학생들은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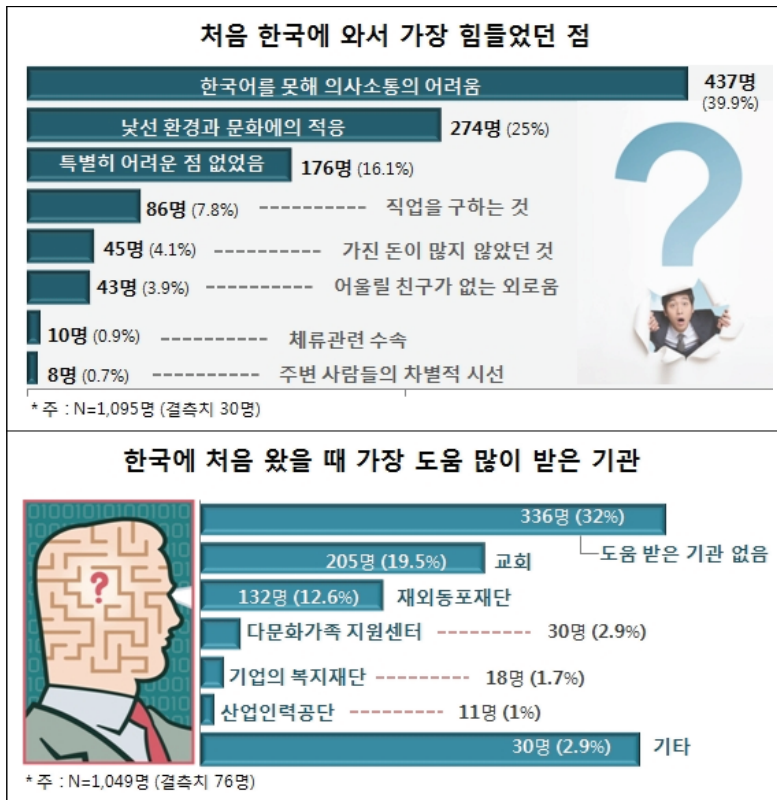
이 연구는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 및 조례를 토대로 하여 국내, 특히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고려인들이 서울에 정착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게 고려인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행정 조치들을 제언하려고 한다.

1)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7」 참고할 것

2) 조이나, 2016, “한국 내 고려인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학과 석사 학위논문, 2쪽

이주 고려인 정착화 과정에서 노무·언어·비자 등 문제점 ‘수두룩’

아래 그래픽에서 알 수 있듯이 도움받은 기관이 없음에 336명(32%)이 표시하였다. 공식적인 지원센터, 재외동포재단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주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교회 등에서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공식 기관들의 더욱 적극적인 의지, 행동, 방안모색이 필요할 때이다. 이주 고려인들이 겪는 문제점으로 “노무문제, 비자문제, 의사소통, 의료지원”이 주로 거론된다.



서울시, 조례 제정해 불안정한 법적 지위 개선 등 다각적 지원해야

이주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특별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안산시 등의 조례가 그 좋은 사례이자 본보기이다. 다음과 같은 필수 방안들은 조례가 우선 제정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한국어 능력 함양을 지원해야 한다.

의사소통능력은 일상생활, 취업활동 등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 조건으로 학교 및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활 사이클별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조건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접근성과 시간대가 중요하다. 이주 고려인과 그 후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집 근처에 있어야 하며, 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려인지원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이주 고려인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성있는 책임감을 지닌 센터가 필요하다. 또한 이 센터를 통해 고려인 사회가 연계되면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거점이 구축되는 것이다. 사할린 한인의 처우와 비교해서 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는 한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고려인 이주사 및 생활사, 독립운동사 등 고려인의 역사를 정리하고, 독립운동가 후손찾기 사업 등으로 고려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또한 각종 기념사업을 전개하여 이주 고려인과 그 후세들이 민족의 역사와 본인들의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고려인 4세, 5세들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 법령에서 지정하는 복지지원과 서비스 대상에서 고려인 청소년은 제외되고 있다. 고려인들의 법적 지위가 안정화되어야 하며, 중도 입국한 고려인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현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도 적합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01 연구 개요	2
1_연구 배경	2
2_연구 목적 및 방법	10
02 고려인의 이주와 문제점	12
1_고려인의 이주 실태와 현황	12
2_고려인 마을의 형성과 조례 분석	19
03 이주 고려인의 실태조사	24
1_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24
2_개인별 면담 분석	31
04 이주 고려인에 대한 대책 및 제언	42
참고문헌	53
부록 설문자료 및 기타 자료	55

표

[표 1-1]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	9
[표 2-1] 국적별 체류 현황(2018.08.31.)	17
[표 2-2]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국적별 현황(2018.08.31.)	7
[표 2-3]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국적별 현황(2018.08.31.)	7
[표 2-4]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주현황(2018년 6월)	8
[표 3-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	30
[표 3-2]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및 해당부처	35

그림

[그림 1-1] 외국인 관련 정부 정책	7
[그림 2-1] 고려인 대상 설문 조사	15

01

연구 개요

1_연구 배경

2_연구 목적 및 방법

01 | 연구 개요

1_연구 배경

2018년 9월 현재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연방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의 수는 5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8만 1천 명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 10만 9천여 명의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수는 30만 명을 넘는다.¹⁾ 이들은 2014년 현재 방문취업(H-2) 14,185명, 재외동포(F-4) 9,384명, 영주권 약 391명, 방문 동거(F1) 461명, 그리고 학생 비자 또는 단기 체류자 기타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²⁾

국내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주로 경기도 안산시, 인천광역시에서 밀집지역을 이루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다. 특정 지역, 즉 공단이 밀집한 지역에는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외국인이 많은데, 중도 입학한 학생들이 급증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세계적 차원에서 지구화의 변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사회에서 국경 건너편의 다른 사회로 인간의 이동 현상으로부터 출발한다.³⁾ 이와 관련된 연구와 각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를 기반으로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시로 이주한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게 고려인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행정 조치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7」, 중앙아시아는 아시아 중앙부 지역으로 범위는 일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으며, 때때로 러시아의 알타이, 몽골, 아프카니스탄,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가 포함된다.

2) 조이나, 2016, “한국 내 고려인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학과 석사 학위논문, 2쪽

3) 서복원, 2013, “한국사회 트란스미그란트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논문

1) 고려인의 역사

한인들은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 등 세계 170여 개국에 이민을 나가 현재 700만 명의 해외 동포들이 있다. 그 중 이민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은 러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이다. 러시아의 한인은 가장 오랜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고난에 찬 이주의 역사를 안고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한인들은 꾸준히 북쪽으로 이동하여 황무지를 개간하며 정착지를 넓혀갔으며 지속해서 새 땅을 찾아 이동해갔다. 그 후 1888년 한국과 러시아 간에 “한·러 육로통상장정”이 체결되어 한인 이주민들을 러시아로 귀화시키고,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나왔다.

이러한 한인 이주민의 집단촌을 배경으로 항일운동 기지가 형성되었다. 유인석, 이범윤, 홍범도, 이상설 등은 ‘13도의군’을 조직했으며 원명회, 권업회 등이 만들어져서도 하였다. 1917년에 들어서 러시아에 거주했던 고려인이 이미 10만여 명에 다달았다. 1937년까지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보시예트를 중심으로 연해주 전 지역에 고려인 학교만 300여 개가 있었고, 이 중 우수리스크시에는 고려인 사범 전문학교가 세워졌으며 신문과 잡지도 여러 개 출간되고 있었다.

1925년 소련 외무부는 고려인들의 이민이 계속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달했고 이 때문에 한인들의 이주는 거의 중단되었으며 한반도와의 연계가 끊어지게 되었다.

그 후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스탈린은 일본과 일전을 예견하고 극동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게 되었다. 1937년 8월 21일 소비에트 인민위원부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428-3266호로 “극동 국경지대로부터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공화국으로 추방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소련 정부는 극동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한 명도 남김 없이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추방하였다. 1938년 초까지 이주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이의 1/3을 비롯하고 이주민 18만 명 중에서 1/5이 사망하였다고 한다.⁴⁾

18만 명의 이주민 중 많은 수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지역에 분산되었다. 춥고 혹독한 첫 겨울을 견뎌낸 고려인들은 봄이 오자 물을 찾아 쌀농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련 정부는 이곳에서도 고려인들을 계속 탄압하여 고려인들의 거주지 이전 자유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자유를 박탈하였으며, 직업 선택 자유도 제한하였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붕괴되었다. 소련 구성원 중의 하나인 발트 3국으로부터 시작된 공화국들의 독립선언은 15개 공화국 모두가 독립을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러시아도 이를 인정하였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각 민족 공화국이 독립국가가 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고려인은 자동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 버렸고,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이 당시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20만 명, 카자흐스탄에는 약 10만 명, 러시아에 13만 8천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독립을 선언한 후 각 국가가 자기 민족의 고유 언어를 공화국의 공식 언어로 책정하기 시작하였고 러시아어는 외국어로 전락하였다. 해당국의 민족어를 모르는 다른 민족은 러시아어를 구사한다고 해도 제2의 민족으로 지위가 격하되었으며, 사회 전반에서 고개 들기 시작한 민족 차별이 다민족 사람 간의 관계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때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있던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습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군대나 국가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일자리, 대학 진학 등에서 자기 민족 우선 원칙이 적용되었고 심각한 민족 차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를 상대적으로 빨리 습득하여 민족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카자흐스탄도 정부 기관에는 카자흐민족의 비율이 74%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인들은 자신의 터전을 떠나 생활 조건이 좀 더 나은 곳을 찾아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다.⁵⁾

4) 강니콜라이, 2006, 「중앙아시아 고려인 재이주 실태와 과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149쪽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유일한 국가 공용어로 우즈베키스탄 언어만 인정하는 등 민족 차별적인 강경책을 실행하였고,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했는데도 경제가 침체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그리고 한국으로까지 이주를 실행하였다.

구 소비에트연방공화국 시절에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국경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립 국가로 분리된 후에 이러한 월경(越境) 행위는 제한되었고, 국제 이주로 인식되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많은 고려인은 혼인, 취업, 자녀 교육을 배경으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중앙아시아 국가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으로 이주하였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고려인은 독립국가연합 내 국가들 곳곳에 가족과 친족들이 뿔뿔이 이산(離散)되었다. 이산된 고려인은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왕복 이동하였고, 전화·인터넷·SNS 서비스 등의 통신 매체, 선물 교환, 송금 등의 방법으로 국경을 초월한 친족 공동체의 유대를 맺고 있었다.⁵⁾

이들이 지닌 초국가적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국 사회에서 부모 세대의 시민권 제한은 후속 세대의 유동적인 정체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한국으로의 이주 열망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국가를 초월한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모국 사회와 이주 사회에서 겪은 차별은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이

5) 러시아 연방 최고 소비에트는 1993년 4월 1일 중앙아시아에 살다가 러시아로 돌아오는 고려인들에게 명예와 국적을 회복시키는 법령을 선포하기도 하였다(강니콜라이, 위의 논문, 158쪽).

6) 기존의 전통적인 이민자들은 모국과의 단절적인 관계 설정을 전제로 이주국 일국의 틀 내에서 새 사회의 동화와 적응을 기본 지향으로 하며 삶의 형태를 구성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구화 시대에는 이주국의 제반 제도들에 통합되는 동시에 모국 사회와 국경을 가로지르는 초국적 활동을 증대시키며 초국적 사회네트워크(TRANSNATIONAL SOCIAL NETWORK)를 형성하며 꾸준히 유지시키고 있는 새로운 이민자들, 즉 트란스미그란트(TRANSMIGRANT)가 나타나게 되었다(서복원, 2013, “한국사회 트란스미그란트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4쪽).

같은 여러 층위의 차별을 받은 경험은 국가를 초월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들의 정체성은 이주 사회 내부를 지향하는 동시에 이주 사회의 외부인 자신의 모국 사회에도 열려 있게 되는 것이다.⁷⁾

셋째,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한 고려인들은 모국과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흔들리고 있다. 양쪽 국가에 정주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판하는 한편, 선진국 한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고 성공하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친척 및 친지를 불러들이고 싶은 열망이 나타나게 되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한국 발전상에 자신의 성장과 정착을 품는 것이야말로 이주 고려인들이 국내로 유입하는 가장 큰 배경일 것이다.

넷째, 모국과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 불안정은 양쪽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로 출현하였다. 이곳의 고려인은 독립을 계기로 불어닥친 민족중심주의와 이슬람주의의 영향을 받아 삶의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독립 이후 장기적인 실업으로 국가 경제가 매우 악화된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주하던 고려인은 ‘생계’를 위해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거나 주변 국가와 한국으로 국제적인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 해체 이후의 삶은 기초적인 의식주마저도 붕괴되는 위기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시스템 속에서 보장된 의료, 교육, 주택은 사라졌고, 국가 체제가 변화하는 혼동 속에서 1998년 러시아는 국가 채무불이행 선언(디폴트)을 하기에 이르렀다. 디폴트를 계기로 고려인은 돈벌이를 위해 한국으로 향하게 되고 이후 그 수가 급증했다.⁸⁾

7) 서복원, 2013, “한국사회 트란스미그란트에 대한 연구”, 1~4쪽

8) 서복원, 위의 논문, 32쪽

2) 현황

[그림 1-1]은 외국인과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을 보여준다.⁹⁾ 한국에는 노동 시장이 이중화되어, 소위 3D 업종에 종사할 저임금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였다. 주로 아시아 국가 출신의 단순 노동자들이 국내로 유입되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문제시되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3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하였다.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외국인에게 기술을 연수하고자 1991년 도입된 제도로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 도모 및 기업 연수를 통한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제도는 1993년 11월 도입되어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해결사 노릇을 해왔는데 시행 초기에는 연수 기간이 2년이였다.¹⁰⁾ 그러나 1998년 4월부터 연수를 받은 후 소정의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1년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고, 2001년 12월부터 연수 기간을 1년, 취업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였다.¹¹⁾

연수 취업제는 2년 동안 연수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1년간 노동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연수업체의 추천을 받아 일정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기능 자격시험에 합격한 외국인 노동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제공



[그림 1-1] 외국인 관련 정부 정책

9) 김수진, 2015, “서울시 광희동 외국인 밀집지의 형성 과정 연구”, 서울시립대 공학석사학위논문

10)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75>.

11) 김수진, 2015, “서울시 광희동 외국인 밀집지의 형성 과정 연구”

하였는데, 제정 초기에 제한되었던 2년간의 연수는 2000년 4월부터 1년 연수, 2년 취업으로 조정되었다.¹²⁾

또한 정부는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조건 면에서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었다.¹³⁾ 이 제도는 1993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생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를 편법으로 활용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법 취업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하고 정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이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미국 등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제도를 2004년 8월부터 시행하였다.

고려인은 다른 중아시아 국적 출신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단순 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왜냐하면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 이주한 동포(중국과 독립국가 연합지역 동포)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책으로서 재외동포의 단순노무분야(서비스 업종)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취업관리제)가 2002년에 도입됐다.¹⁴⁾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지역 동포들에게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단순 노무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가 2007년 3월에 도입되었고 또한 ‘무연고 방문 취업’을 위한 H-2 비자가 발급되었다.¹⁵⁾ 2007년 도입된 특별고용허가제인 ‘방문취업제’ 실시를 계기로 중아시아와 러시아 일대에 거주하던 고려인 중 많은 수가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12) 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m_sys/imm_m_s01/1175302_20853.jsp

13) 한승준 외, 2009, 「아시아국가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정책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2~133쪽

14) 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m_sys/imm_m_s02/1175314_20855.jsp

15) 김경학, 2014, “중아시아와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 17, 265쪽

2013년 8월 현재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일대 국가로부터 국내 유입된 외국인 노동력은 5만 3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를 소지하여 고려인으로 추정될 수 있는 인원은 약 198,330명이다. 여기에 영주비자(F-5) 소지자, 결혼이민자, 단기방문비자(C-3) 소지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국내에 3만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⁶⁾

현재 경기도 안산 일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1만여 명의 고려인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에도 약 3,000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¹⁷⁾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1]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인구 수		
	1991	2003	2013
몽골	285	14,544	24,175
우즈베키스탄	-	11,916	38,515
카자흐스탄	-	4,490	2,967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의 수교 이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행된 통계연보에 따르면 중앙아시아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그리고 취업 분야가 단순 노무직으로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이들 국내 체류 고려인들이 합법적인 체류 및 적응을 위해 한국 정부는 2013년 고려인동포법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용해 한국 조기 적응에 도움을 주고,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활용해 러시아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김해시와 기타 지역의 고려인 마을이 형성된 도시

16) 김경학 역음, 2015,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 전남대학교출판부 참고할 것

17) [표 1-1]은 김경학 논문에서 재인용하였음(위의 논문, 260쪽)

18) 김수진, 2015, “서울시 광희동 외국인밀집지의 형성 과정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공학석사학위논문, 21쪽

마다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있다. 안산 고려인지원단체 ‘너머’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가 대표적인 예이다. 서울시도 서울시 외국인 비즈니스 종합지원기관인 서울 글로벌센터 3곳 중 동대문 글로벌센터에서 러시아어 지원을 하고 있다.

2_연구 목적 및 방법

그동안 한국에 들어온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의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 연구의 하나로 다루어지거나 우리나라 고려인들의 집중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이나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서울시의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의 최근 현황을 분석하고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의 현장을 직접 찾아봄으로써 2018년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이주 고려인들의 특징과 이들의 고국 정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는 데 의의를 둔다.

또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며¹⁹⁾, 다른 고려인 마을에서 실행, 준비하고 있는 각종 조례 등을 분석하여 이 연구의 대안 모색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중앙아시아인 거리 형성과 성장 배경 및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사회적, 물리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서울시민의 안정적인고 조화로운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9) 설문조사는 동북아평화연대의 연구에 상당히 힘입은 바 컸으며, 그 조사 결과를 이 연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02

고려인의 이주와 문제점

1_고려인의 이주 실태와 현황

2_고려인 마을의 형성과 조례 분석

02 | 고려인의 이주와 문제점

1_고려인의 이주 실태와 현황

2015년 재외동포재단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일대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약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17년 통계에 따르면 4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²⁰⁾ 그 전체 숫자는 예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분은 독립국가연합 내에서 이주하거나 국내로 유입한 경우이다.

그렇지만 국내에 어느 정도의 고려인들이 들어와 거주하는지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²¹⁾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통계에는 흔히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동포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고려인들은 이 같은 기준이 없는 상태다.²²⁾

고려인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 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²³⁾ 이들은 조부나 증조부의 고향을 찾거나 친척들이 모여사는 곳으로 들어와,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사례가 많다. 소규모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택, 취업, 교육 등의 정보를 교환하므로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동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한 공동체가 좀 더 확대된 규모로 형성된 곳이 경기도 안산시, 광주광역시 등의 고려인마을이다.

이곳에선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다문화학교, 쉼터 등

20) 재외동포재단, 「2015 재외동포현황」 및 「2017 재외동포현황」

21) 이 연구팀에서도 중부교육지원청 산하 초중등 학교에 고려인 자체가 얼마나 있는지, 출신 국가별로 분류되어 있는지, 부모의 직업군이 어떠한지를 조사하였지만 제대로 된 통계를 찾을 수 없었다.

22) 외교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년 8월호

23)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18.04.01. 조례 제5078호)

이 건립되어 고려인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려인 4세는 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성인이 되면 다시 태어난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다음 기사를 주목해보자.

우즈베크 출신 등 4000명 광주 정착, 성인은 장기비자 막혀 출입국 반복, 3세까지 재외동포 인정, 혜택 못 받아²⁴⁾

“어린 딸을 데리고 90일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는 삶이 너무도 힘듭니다. 제발 할아버지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맘 놓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레나(가명, 22세, 여)씨는 2015년 10월 단기방문비자(C3-8)로 입국한 후 3개월에 한 번씩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처럼 만 20세가 넘은 고려인 4세는 장기체류비자를 받지 못해 90일마다 자신이 태어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한다. ‘재외동포법’이 고려인 3세까지는 ‘재외동포’로 장기체류를 인정하지만 4세부터는 ‘외국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데도 비행기표를 살 돈조차 벌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부터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고려인 4세들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려인 3세인 김알렉산드라(56)씨는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2016년 한국에 들어온 후 여섯 번이나 러시아로 출국했다 돌아온 딸의 이상한 여행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²⁵⁾ 이러한 요청에 대해 청와대 측은 고려인 4세들과 부모들이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해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었다.

24) 이경엽, “운명처럼 받든 조국에 홀대받는 ‘유랑자 고려인’”, sky daily, 2017. 04.14. 그래픽 자료는 해외동포재단의 자료를 재인용한 것이다.

25) 정대하, 고려인 동포가 문 대통령에게 보낸 ‘눈물의 편지’, 한겨레, 2017. 08.07

법무부는 “4세대 고려인, 중국동포가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게 2017년 9월13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는데, 이전까지 고려인과 중국동포는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 자격(F-4) 또는 방문취업 자격(H-2)을 획득할 수 없었다.²⁶⁾ 부 또는 모가 F-4 자격으로 국내체류(만 25세까지)하거나, H-2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일 때만 국내체류가 허용됐고 이후에는 단기방문 비자(C-3)를 받아 본국과 대한민국을 오가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고, 그동안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되었지만, 이 시행령으로 2019년까지 방문동거 자격이 부여되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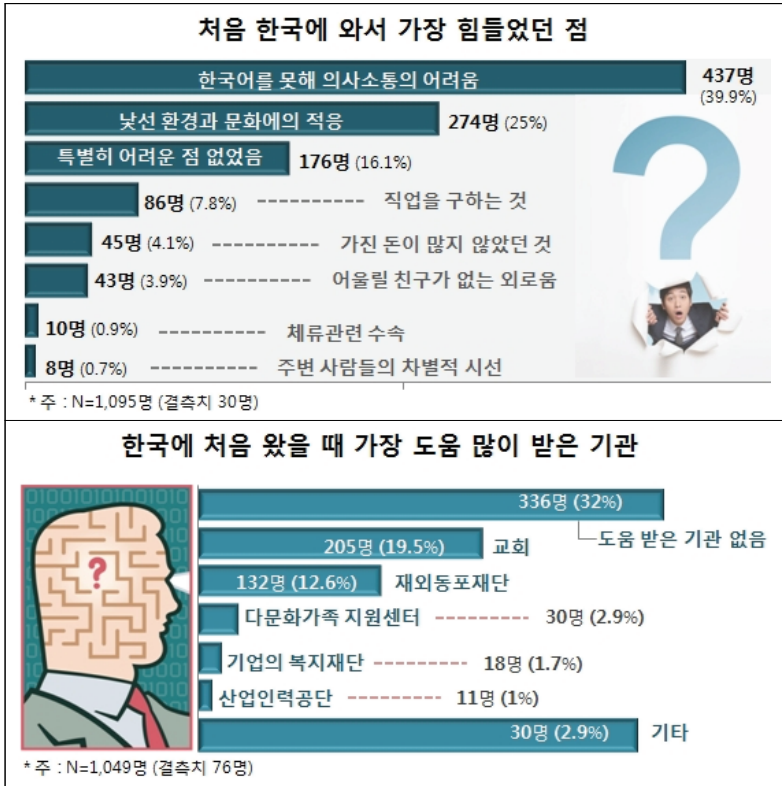
정부의 이 조치는 상당한 수용력을 보여주었지만,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즉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부모가 한국에 거주 중인 고려인 4세’로 규정되어 있다.²⁸⁾ 만약 부모가 한국에 없이 고려인 4세 단독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전과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 이는 부모가 없이 가족끼리 국내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 4세의 상황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흡한 조치는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는데도 정부 부처의 대응은 미온책임 따름이며 고려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조치이다. 1937년 강제 이주를 당한 우리 민족의 일부인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태어나 슬라브 문화, 이슬람 문화와 뒤섞여 살아왔기에 정체성 혼란도 겪고 있다. 이러한 출신 배경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2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계 독일 동포들에게 시민권을 모두 부여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통일 독일의 주요 일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독일의 방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²⁹⁾

26)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18년 9월 개정

27) 법무부, 고려인-중국동포 4세 국내체류 한시적 허용, 동북아신문, 2017. 9. 13

28) 법무부 보도자료, “4세대 동포, 조국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세요”(2017.09.12)



[그림 2-1] 고려인 대상 설문 조사

자료: 이경엽 기사, sky daily, 2017. 04.14.

고려인들이 한국말에 서툰 것도 생활에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다. 이는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점이다([그림 2-1] 참고). 대부분의 고려인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 해 근무 여건이 열악한 공장이나 농촌에서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고려인 4세를 겨냥한 비자 연장이나 취업 알선을

29) 김승력, 2015, “국내체류 고려인을 위한 고려인 특별법 개정안의 현황과 전망”, 「이슈브리프」, IOM이민정책연구원 No.2015-16

미끼로 한 사기, 임금 체불도 속출하고 있어 언어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³⁰⁾

위 그래픽에서 알 수 있듯이 336명(32%)이 도움받는 기관이 없다고 응답한 점은 충격적인 수치일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지원센터나 재외동포재단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주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교회를 찾아가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기관 및 공식적인 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적 편의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이주 고려인들을 찾아 나서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한 지원센터의 상담자는 이주 고려인들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 노무문제, 두 번째 비자문제, 세 번째 의사소통, 네 번째 의료지원”을 거론하면서 대학졸업자도 그 경력을 해당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결국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며 심각한 자기비하에 빠져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더욱이 센터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러시아어에만 한정되었다는 점, 아이들은 센터 방문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중 저녁 시간 혹은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하지만, 상담자는 그다지 없다고 한다.³¹⁾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하는 외국국적동포³²⁾의 수는 862,722명으로 전월보다 1.7%(11,643명) 감소하였으며, 전체 체류외국인(2,308,206명) 대비 37.4%를 차지하고 있다.³³⁾ 외국국적동포의 수는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전체의 83.2%로 다수지만, 우즈베키스탄(3.8%), 러시아(2.76%), 카자흐스탄(1.31%)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외국국적동포도 상당

30) 최경호, “뿌리 찾아 한국 왔지만 ... 90일마다 '추방'되는 고려인 4세”, 중앙일보, 2017.11.15

31) 인터뷰 대상자의 요청으로 근무처와 이름을 밝히지 않았음.

32) 재외동포(F-4) 및 기타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의 합을 의미함.

3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8월호

한 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 국적별 체류 현황(2018.08.31.)

(단위 : 명)

계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캐나다
133,982	717,383	44,978	32,829	23,786	15,966
	카자흐스탄	오스트레일리아	키르기즈	뉴질랜드	기타
	11,357	4,640	2,614	2,415	6,754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년 8월호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CIS(독립국가연합)에서 국내로 건너와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고려인)의 수는 7만 명 정도이며 그들의 동반 자녀를 포함하면 8만 명 이상의 고려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2-2]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국적별 현황(2018.08.31.)

(단위: 명)

국적 계	중국	미국	러시아	캐나다	오스트레 일리아	카자 흐스탄	기타
436,539	327,137	44,677	22,781	15,838	4,606	3,948	17,552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년 8월호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 방문동거(F-1) 순이다.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출신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 현황을 보면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많지만,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이다.

[표 2-3]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국적별 현황(2018.08.31.)

(단위: 명)

국적 계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타
240,400	212,280	18,842	6,098	3,180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년 8월호

법무부가 발표하는 2018년 6월 기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현황 중에서 서울지역에는 전체 외국국적동포의 34%에 해당하는 14만 5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그중에서 100명 이상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중앙아시아(CIS) 국가 지역의 거주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4]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주현황(2018년 6월)

(단위: 명)

구분	구	성별	총계	한국계 러시아	우즈베키 스탄	카자흐 스탄	키르기 즈스탄	타지키 스탄
총계		계	428,393	21,939	9,688	3,744	734	36
		남	207,024	11,815	4,837	2,075	382	13
		여	221,369	10,124	4,851	1,669	352	23
서울 특별시	소계	계	145,991	1,026	815	251	82	9
		남	65,043	403	274	91	26	2
		여	80,948	623	541	160	56	7
	관악구	계	11,680	59	41	13	4	1
		남	4,973	27	13	6	1	0
		여	6,707	32	28	7	3	1
	동대문 구	계	3,839	89	85	42	10	3
		남	1,689	39	32	18	3	0
		여	2,150	50	53	24	7	3
	용산구	계	4,648	88	46	25	3	0
		남	2,104	28	16	8	0	0
		여	2,544	60	30	17	3	0
	중구	계	3,912	413	317	67	23	0
		남	1,690	165	100	24	5	0
		여	2,222	248	217	43	18	0

자료 : 출입국, 「통계월보」(2018년 6월)

[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인들은 주로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관악구 등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2_고려인 마을의 형성과 조례 분석

정부는 2013년 고려인의 이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위 「고려인동포법」과 그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고려인의 지위와 지원사업을 규정하였다. 지원사업은 실태조사, 체류자격 취득,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문화센터 건립, 한국어와 기술교육의 교육활동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고려인 마을이 형성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조례를 만들어 고려인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려인 마을이 형성되고 고려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지속해서 실행되고 있는 곳 중 대표적인 곳이 광주광역시와 안산시일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고려인센터가 ‘고려인마을’ 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10월 20일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조례’ 제정 기념 ‘제1회 고려인의 날’ 행사가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센터 인근 공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시교육감과 광산구청장 등이 참여하였고, 공식행사, 축하공연, 음식 나눔 잔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고려인센터는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던 ‘제12차 세계한상대회’(2013년 10월 29일~31일)에도 참여하여 고려인 협동조합을 홍보하는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고려인마을 홍보 동영상, 고려인 수난사 전시관, 고려인 전통 의상관, 고려인 전통 음식 판매점을 운영하였다.³⁵⁾

이러한 활동들은 광주광역시에서 마련한 조례 덕분이다. “고려인들의 지역 사회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34) 외교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690호, 2013.03.23.) 및 외교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07호, 2014.11.11.)

35) 김경학, 2014, “중아시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4호, 275쪽

마련”³⁶⁾하여 고려인들이 광주광역시의 특정 지역에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의 책무로서 실태 조사와 연도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기념행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화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였다.³⁷⁾

고려인 대상의 지원사업들은 앞서 제기되었던 정착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모색이 엿보인다. 고려인의 법적 지위, 한국어 교육, 인권 옹호 및 차별 방지, 통역 서비스 제공, 자녀 돌봄 지원,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보면, 고려인들의 정착을 위해 최우선적인 과제를 법적으로 선정해놓았다고 할 수 있다.³⁸⁾

이 연구팀에서도 주장하듯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려인 주민센터가 매우 필요함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광주광역시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센터의 운영, 업무의 위탁 관련 사항도 마련해 놓고 있다.³⁹⁾

더욱이 고려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고양하기 위한 ‘명예시민’제를 규정하여 고려인들이 광주광역시의 시정(市政)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⁴⁰⁾

다양한 국적을 지닌 노동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안산시도 고려인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이 조례는 앞서 제정된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인의 지위, 지원사업, 시장의 책무, 센터의 설립, 명예시민 등이 그러하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36)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18. 04. 01, 제5078호) 제1조(목적)

37) 위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및 제13조(기념행사 지원)

38) 위 조례, 제8조(지원사업)

39) 위 조례, 제9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운영), 제11조(업무의 위탁)

40) 위 조례 제15조(명예시민)

돋보인다.⁴¹⁾ 지원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안산시의회 의원, 관련 단체의 관계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이루어져 고려인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수립,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불편 사례들을 적절하게 대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인천시 연수구는 점증하고 있는 고려인의 이주 및 정착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고려인’을 포함하고 별도의 조례를 규정하지 않아 아직 미흡한 감이 있다. 고려인 초등학생은 2015년에 33명이었는데, 2017년에 연수구 함박마을의 한 초등학교에만도 94명이나 된다.⁴²⁾ 한시라도 빨리 연수구만의 고려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조례를 활용한 고려인 지원 대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윤화섭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보자. ‘도(道) 차원이 아닌, ‘시·군’ 차원의 조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즉 한국 이주 고려인 동포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안산, 화성, 안성, 평택, 김포)에 편중되어 있어 도 차원의 조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제정된 「경기도외국인주민지원조례」로도 고려인들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더욱이 한국에 이주하는 사람 중에서 중국 조선족 동포의 비중이 가장 큰데, ‘고려인’만을 위한 조례 제정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⁴³⁾

41) 안산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18.01.08., 제2148호) 제9조(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

42) 박진영, “함박마을 온 고려인, 연수구 ‘동행’ 준비, 「인천일보」, 2017.11.30

43) 윤화섭 의원 발의,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761, 2015.11.17.)

03

이주 고려인의 실태조사

- 1_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2_개인별 면담 분석

03 | 이주 고려인의 실태조사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출신 이주 동포들의 실태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더불어 대면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사)동북아평화연대와 공동으로 시행하였으며, 대면조사는 중앙아시아지역(CIS)과 러시아 지역 출신의 고려인을 선정하여 거주상황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1_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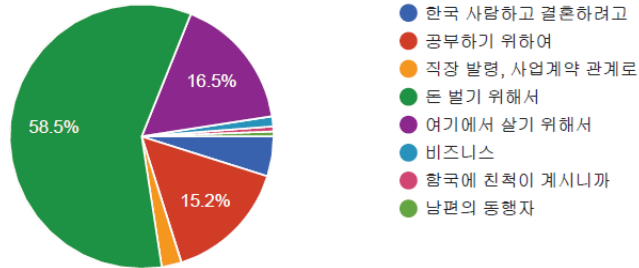
(사)동북아평화연대⁴⁴⁾의 설문지는 종합요약(5문항), 1. 개인기본상태(8문항), 2. 국내거주실태(5문항), 3. 경제활동실태(6문항), 4. 노동조건(6문항), 5. 한국생활 적응(5문항), 6. 한국어 사용 현황(2문항), 7. 청소년아동교육(4문항) 8. 건강 및 의료환경(6문항), 9. 고려인의 적응 지원문제(5문항) 등으로 설계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서 고려인의 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동북아평화연대에서 2018년 8월 시행한 고려인의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인들의 국내 이주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58.5%로 가장 컸고, 한국에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16.5%), 공부하기 위해서(15.2%) 등이 뒤를 이었다.

44) (사)동북아평화연대에서 국내 고려인들의 실태파악과 권익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2018년 8월, 수도권 지역 거주 고려인 200명에서 설문지를 배부하여 171개의 응답을 받았다. 이 연구 진행 과정에서 동북아평화연대 설문조사 기획자와의 면담에서 설문조사 내용과 설문 결과를 공유하기로 협의하였다.

0-1. 귀하는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왔나요?

응답 16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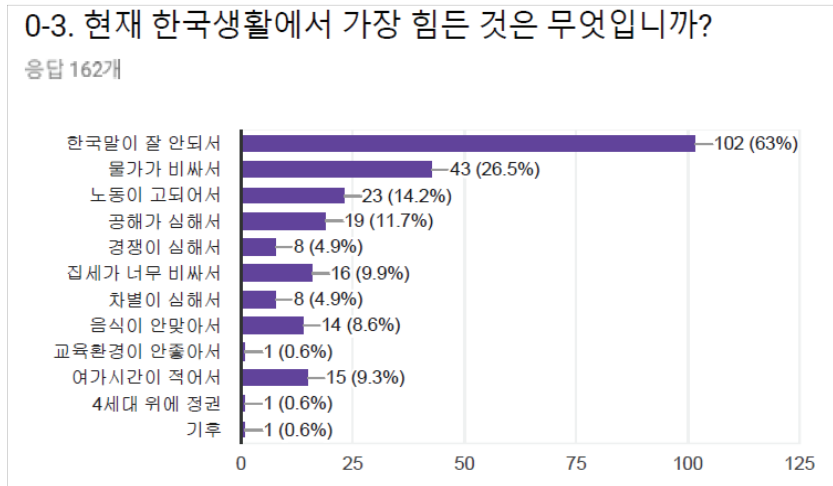


이들이 한국에 이주하는 과정과 거주하는 동안에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은 주로 지인과 가족(81.5%), 교회 등 봉사단체(10.2%)로부터 받았고, TV 및 인터넷(5.7%)을 이용하였으며, 지역글로벌센터 및 다문화센터(4.5%), 지방자치단체(1.9%) 등의 지원은 지극히 미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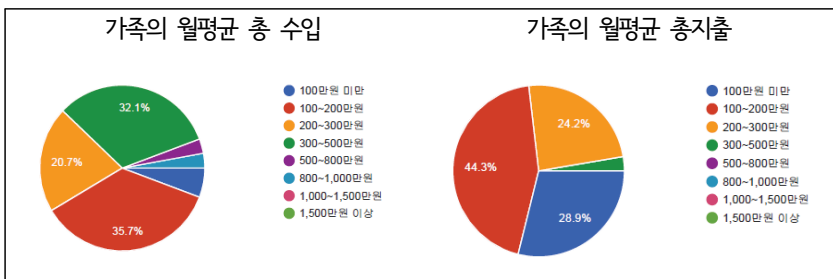
이는 앞의 해외동포재단에서 시행한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단체의 이용이 힘들 수 있거나, 별다른 정착 준비 없이 막연히 돈을 벌기 위해 들어와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사례가 많을 수도 있다. 이주 고려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수용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지점이다.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한국말이 잘 안 되는 점과 물가가 비싼 점, 노동이 고된 점 등이 꼽혔다. 이 때문인지 고려인의 생활을 지원할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말,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고려인을 위한 전문 상담지원센터의 설립(28.4%),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지원(21%), 임금체불, 노동문제, 법적 문제 등의 지원(17.9%) 등의 순이었다. 그밖에 고려인특별법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체류환경의 조성(13%),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도와 기본상식교육(11.1%) 등의 지원욕구를 제시하였다.

본인과 자녀의 한국어 학습 욕구에 대해서는 고려인들은 일요일, 평일야간, 토요일 순으로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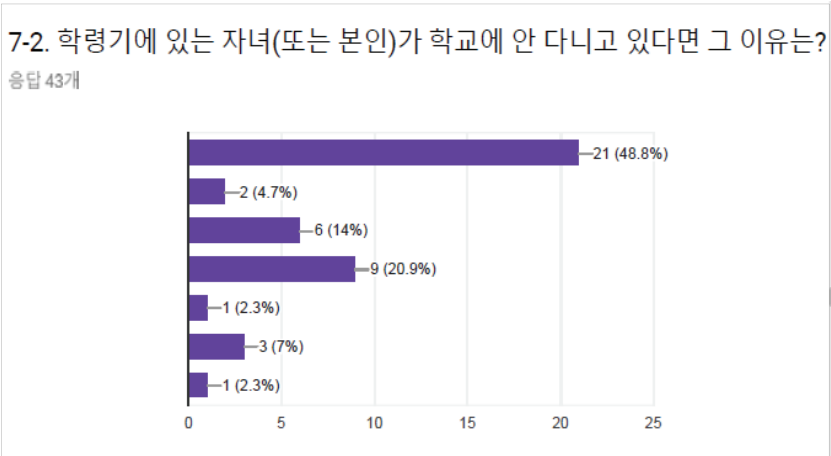
고려인의 1인당 수입은 월평균 100~200만 원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 전체의 총수입과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족의 생활비 중에서 식비, 집세,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통신비와 의료비 등의 지출까지 포함하여 지출하고 나면 수입 중에서 예금할 수 있는 여유는 많지 않았다.



고려인들은 대체로 매월 월급형태로 보수를 받고 있으며, 한국 생활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1.3%,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5.3%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저 그렇다는 의견도 11.7%나 있었다.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말에 대해서는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의사소통과 일상적 대화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지만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필요한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이유로는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다(71.9%)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주변에 한국어를 배울 데가 없었다(9.1%)는 응답도 상당수 있었다.

가족 구성원 중 학령기임에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170명 중 43명이나 있었고 그 이유는 한국어가 되지 않아서(48.8%), 러시아계열학교를 다녀서(20.9%), 교육시스템이 달라서(14%)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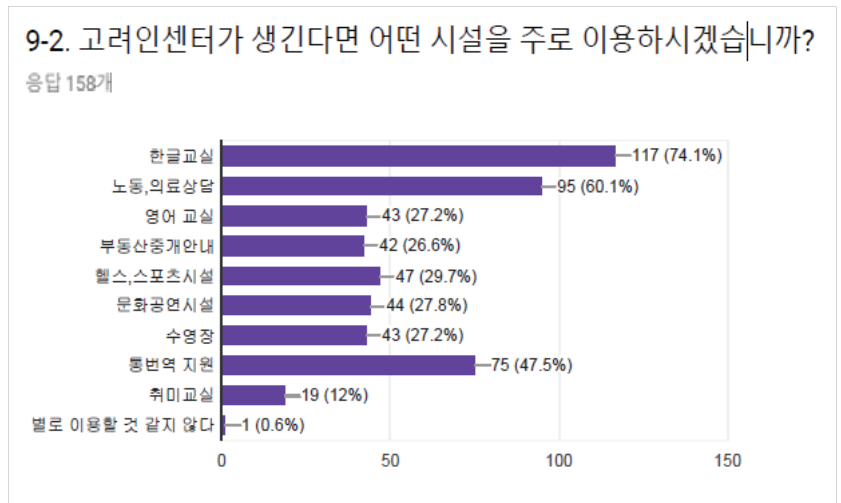


학령기의 가족, 자녀(또는 본인)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 형태는 한국의 초중고 학교가 41%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학력인정학교의 재학도 30%로 많았으며, 외국인학교(국제학교)가 7.9%, 러시아 대사관학교가 4.8%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여서(51.1%)였으며, 그밖에 친구가 없는 점, 학원수강, 학습경쟁이 심한 점, 학습량이 많은 점 등을 들었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건강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운 이유로는 의사소통이 안 되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42.1%), 진료비가 비싸거나 돈이 없는 경우(36.4%), 일이 바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21.4%)가 제시되었다.

고려인을 위한 생활, 법률상담, 한국적응 등 지원센터와 같은 전용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필요하다는 응답(88.3%)이었으며, 고려인지원센터가 생기는 경우 이용 욕구에 대해서는 한글교실, 노동의료상담, 통번역지원 등의 요구가 많았다.



(사)동북아평화연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동북아평화연대는 최근 서울지역 200여명으로부터 실태파악 설문조사 실시
○ 이중 답변자 171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음(주요항목)

<설문조사에 나타난 고려인요구 요약> *는 복수선택항목

1. 출신국가	우즈베키스탄(46%), 러시아(37%), 카자흐스탄(11%), 키르기스스탄(2%)
2. 입국목적	돈을벌거나 정책(75%), 공부(15%), 결혼(5%)
3. 가장 힘든점 *	한국어(63%), 물가(27%), 노동(14%), 공해(12%), 주거비(10%)
4. 시급한 지원책	한국어(35%), 전문상담센터(28%), 복지지원(21%), 노동임금(18%)
5. 한국어 배울 의향	일요일(35%), 평일아간(28%), 토요일(24%), 평일주간(13%)
6. 한국어 못배운 이유	시간부족(72%), 배울 장소(9%), 일이고되어(6%)
7. 자녀학교적응 어려움	한국어(51%), 학원수강(11%), 친구(11%)
8.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한국 중고등(29%), 한국초등(18%), 러시아계(35%)
9. 공동생활 가족수(명)	1명(22%), 2명(30%), 3명(22%), 4명(16%)
10. 가구별 수입(만원)	100미만(6%), ~200(36%), ~300(22%), ~500(32%), 500이상(6%)
11. 종사하는 직업	무역통번역(28%), 공장제조(25%), 자영업(13%), 사무공공(9%), 건설일용(9%)
12. 고려인센터 필요성	필요하다(93%), 필요없다(2%)
12. 센터 필요시설 *	한글교실(74%), 노동의료상담(60%), 스포츠(57%), 통번역지원(48%), 문화공연(28%)

정부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잔존하고 있다.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이 좋은 예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사회통합과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표준화된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을 이수하도록 격려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을 격려하기 위해 과정을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과정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⁴⁵⁾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한국어 과정(결혼이민자 최대 215시간, 일반이민자 최대 415시간)과 한국사회의 이해 과정(모든 참가자 모두 50시간)인데 프로

45) 법무부 공고 제2017-323호

그램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⁴⁶⁾

[표 3-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기초	초급1	초급 2	중급 1	중급 2	
이수시간		15	100	100	100	100	50
사 전 평 가	결혼이민자	0~10점	11~29점	30~49점	면 제		50~100점
	일반이민자	0~10점	11~29점	30~49점	50~69점	70~89점	90~100점

자료: 통계청, 「2015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시험조사-조사원 사전 교육 교재」(2014년 6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주 고려인들이 215~415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주를 고민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주’에 대한 여러 대비책을 준비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런 관점에서 피교육자의 사정을 등한 시한 정책이아말로 탁상공론이 아닐까 한다.

한편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에 대한 정체성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상자들을 네 가지 정체성 범주로 분류하였다. 카자흐스탄 사람이어도 자신을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통합’의 범주, 자기를 카자흐스탄 사람으로만 의식하는 ‘분리’의 범주, 한국사람도 아니고 카자흐스탄 사람도 아닌 ‘소외’의 범주와 더 이상 카자흐스탄 사람으로 의식하지 않으며 한국사람으로만

46) 통계청, 「2015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시험조사-조사원 사전 교육 교재」(2014년 6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아래와 같다. ○ 귀화필기시험 면제('08. 4. 4. 시행), 및 면접심사 면제('10. 7. 1. 시행), 국적취득 심사대기기간 단축('09. 4. 1. 시행)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F-2) 자격 변경 시 가점 부여('10. 2. 1.시행) ○ 일반 영주자녀(F-5-1)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13. 3. 27. 시행) ○ 특정활동(E-7) 변경 시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11. 10. 10. 시행)

의식하는 ‘동화’의 범주이다.⁴⁷⁾ 이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36%는 ‘동화’와 ‘통합’ 범주로 분류된 반면, 64%는 ‘소외’와 ‘분리’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즉,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대부분이 한국에 이주한 후 정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인 장벽에 부딪혀 한국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알려준다. 다문화 사회의 일원 혹은 우리 민족이라는 의식 속에서 ‘동화’의 관점에서 고려인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들의 정체성, 자긍심을 높이면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2_개인별 면담 분석

연구진은 설문조사지에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고려인의 문제의식과 희망사항을 파악하고자 2차례에 걸친 대면 면담 조사를 시행하였다. 1차 면담 조사는 고려인 중에서 이주한 지 오래되어 정착한 고려인과 입국한 지 4년차가 되는 고려인을 면담하여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1차 면담조사의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1차 면담 조사>

- 일시: 2018.08.01. 16:00~18:00
- 장소: 동대문역사공원역 인근 식당
- 면담 진행: 김우경, 강성주
- 면담자: 박000(우즈베키스탄, 65세, 1997년 입국, 장충동 거주). 최0000(우즈베키스탄, 61, 2015년 입국 4년차, 오산시 거주) 박000 딸(29세, 교포4세, 어머니인 박000 여사와 같이 생활하고 있음, 박000 여사 손녀 8개월)

47) 지백 비추이노바, 2017, “국내 고려인 이주자의 사회적 통합 현황”,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석사논문, 9쪽

질문1: 입국 당시 비자 및 현재의 비자는 무엇이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답변: 우즈벡 출신 교포 3세로 F-4비자를 가지고 입국했고, 지금도 F-4 비자이며,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박000여사), 우즈벡 출신으로 러시아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분리되면서 대학졸업을 증명할 길이 없어졌다. 돈을 벌고자 방문취업(H-2)비자로 4년 전에 입국하였다. (최0000)

고려인 대부분은 자영업(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F-4비자를 선호한다. 그래서 처음에 단순 노무만 할 수 있는 H-2비자로 입국한 뒤에도, F-4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가 아는 우즈벡 출신의 고려인들은 한국국적 취득을 가장 희망하고 있고, 영주권 획득, 돈을 벌어서 귀국하는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박000 여사)

대학을 나와도 소련의 붕괴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는 최0000의 발언은 앞서 지원센터의 상담사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한국과 해당국가의 외교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또한 한국국적 취득, 영주권 획득, 돈을 벌어서 귀국이라는 점은 결국 이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희구함을 잘 보여준다. 소련의 붕괴, 독립국가연합의 출현, 해당 국가의 언어 중심 사회로 변화, 이 때문에 러시아어를 활용하던 고려인들의 지위 하락, 경제난 등으로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인 4세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단계에서부터 한국어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함이 절실하다.

질문2. 한국생활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얻고 있고, 주로 어디에 살고 있나?

답변: 먼저 이주한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많고, 자치단체나 정부의 공식적인 적응 프로그램보다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한국생활에 대

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2001년 초
기에 입국하여 대체로 한국생활에 잘 적응한 편이고, 슈퍼를 운영하고 있
어 정보가 많아 입국하는 고려인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자주
찾아오는 편이다. (박000 여사)

서울 지역에는 고려인 마을이라고 부를만한 정착촌은 없고 중구, 동대문
구 등에 각각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고려인단체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
고 있다. 같이 이주하거나 이주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전화나 SNS
등을 통해 연락을 하고 지낸다. 집값이 비싼 서울보다는 주로 공장이 많
은 안산, 오산, 아산, 인천, 광주 등에 많이 살고 있다. (최0000, 박
000여사)

위 답변에서는 정보의 한계가 두드러진다. 정부나 각종 공식적인 지원단체는 자
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낯선 고국에 돌아온 고려인들은 무리를 지어
집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면 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려인을 중심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즉 고려인 3세, 4세 중 교
사, 공무원, 학생 등을 활용하여 고려인 대상 정착 지원센터에서 일하게 하는 것
도 방법일 수 있다. 고려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이주 고려인들이 안심하고
방문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센터로 탈바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도 고려인들의 국내 이주를 기다리기 전에, 더 적극적
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아울러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교류
센터나 문화센터를 설립하고 활용하여 정착 과정의 초기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
을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질문3. 한국생활에서 좋은 점과 힘든 점은 무엇인가?

답변: 우즈베크에서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돈을 벌게 해주어서 고맙다. 한국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물가가 비싸서 아긴다고는 하지만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생활은 가능한데 돈을 모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한다. 지금은 식당에서 주방 일을 보고 있다. 최근 월급이 2개월간 체불된 적이 있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여기 언니(박000 여사)하고만 상의하면서 속만 썩었다. 그래도 박마그다 여사가 한국말을 잘 하여 사장에게 잘 말해주어서 해결되었다. 그리고 다른 지역(영어권 등)에서 온 동포에 비해서 우즈베크 출신 고려인들은 한국인들에게 비호감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 힘든 일을 시키면서도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러시아어를 쓰고 있으며, 한국말을 잘 못하여 지시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같다. (최 0000)

러시아(사할린) 지역에서 귀국한 고려인 2,3세에 비해 중앙아시아 지역(CIS 출신) 고려인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큰 혜택이 없었다(예: 집 제공 등). 안산 등 다른 지방의 고려인들에게는 어린아이의 보육수당으로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서울지역 고려인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서 차별받는 것 같아 서운하다. (박000 여사 딸)

2011년 재외동포재단이 제출한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재정착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지원된 예산은 작년 10억 1천만 원보다 무려 63% 급감한 3억 6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도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고려인 50여만 명 가운데 합법적 체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2만 5천 명~5만여 명(5~10%)으로 2011년 국적회복이나 영주권 취득 등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례는 러시아 영주권 6건과 시민권 10건, 우크라이나 국적취득 131건과 영주

권 312건에 그치고 있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⁴⁸⁾ 이러한 실정이니 위 사람들이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아래 [표 3-2]를 보아도 사할린 한인과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고려인에 대한 처우가 다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이 ‘임대아파트 제공’, ‘기초노령 연금’, ‘의료급여’ 등이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물가 때문에 돈을 모으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위해 임대아파트가 이주 고려인들에게 지원된다면 그들의 국내 정착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 무로나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아파트가 건설된다면 그들의 불만이 다소 누그러질 것이다.

[표 3-2]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및 해당부처

지원내역	지원금액	해당부처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1회)	항공료 : 895천원(실비) 집기비품비 : 1,400천원	사할린한인 1세 : 보건복지부 사할린한인 2세(1세와 혼인한 배우자 및 장애인자녀) : 보건복지부
임대아파트 제공	-	국토교통부
입주비용(1회)	가구당 17,700천원 (2인1가구 기준)	보건복지부
특별생계비	월 75천원	보건복지부
생계·주거비	일반수급자동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사·군구청)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부(사·군구청)
기초노령연금	〃	보건복지부(사·군구청)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사·군구청)

자료: 보건복지부, 2018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안내(2018년 1월)

48) 김도균, “재외동포재단, 동포단체지원 특정지역편중- 고려인 동포지원도 미흡/원유철 의원,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지적, 세계한인신문, 2012. 10. 09

질문 4.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그 이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답변: 임금체불이 가장 큰 어려움이며,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인들은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말을 잘 알아들으면 서도, 고려인들이 아프다거나 월급이야기 등 문제점을 호소하는 내용을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고 탄청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 속 상하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3개월 과정에 등록했다가 일을 위해 중단한 경험이 있다. 한국어를 잘하고 싶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일을 쉬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 0000)

한국학교에 다니는 4, 5세는 한국말을 잘 몰라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하고 흥미를 잃고 있다고 들었다. 고려인을 배려하여 별도의 반을 편성하고 러시아어와 한국말을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보조 교사로 하여, 우선 소통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공부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000)

노무문제와 자녀교육 문제가말로 이주 고려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무문제는 앞서 지적한 언어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 답변에서도 박 000는 오랜 한국 생활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다른 고려인들의 상담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고려인 사회의 거멀못 역할을 하는 박000 여사와 같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자녀교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례로 최근 다문화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경상북도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2018년 9월 말 현재 경상북도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 27만 3,336명 중 8,199명으로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초등학생은 12만 9,305명 중 5,997명으로 5%를 넘어 이미 다문화 사회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⁹⁾ 예를 들어, 경상북도 내 다문화 학생

수는 2010년 1,812명에서 2014년 4,221명, 올해 8,199명으로 4년마다 2배씩 늘고 있는데,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문화 학생 중에서 중도입국 학생의 문제가 심각하다. 중도입국 학생의 대부분은 고려인 후세대이다. “중도입국 학생 한 명은 폭탄과 같습니다. 이 학생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에 온 학교가 혼란을 겪습니다. 그 학생 1명을 위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년간 다문화 학생 교육 정책을 담당해온 경북도교육청 김규석 장학사의 말이다.⁵⁰⁾ 경주 흥무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4월 전교 506명 중 다문화 학생은 123명이었다. 지금은 527명 중 152명으로 28.4%다. 2016년 25명이던 다문화 학생이 지난해는 60여 명, 지금은 152명으로 늘었다. 주변에 단순 노무직 일자리(천북, 외동 공단이 형성되어 있다)가 많고 그 지역의 원룸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현상이 생겼다. 특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근로자 사이에서 이 지역의 직업 상황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고, 이에 따라 러시아 문화권 출신의 다문화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흥무초등학교는 학업 중에 입국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혼란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흥무초에 재직하는 교사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들은 1)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는 점, 2) 같은 학급에서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들이 같이 수업하다 보니 학습 진도를 맞추기도 어렵고, 외국인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이해도가 현저히 낮아 쉽사리 학습 흥미를 잃어버리며, 이와 동일하게 한국인 학생에 대한 수업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 3)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습득이 느린 상황에서 자신들의 고국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4) 수시로 외국인 학생이 전입하여 그때마다 교육과정을 수정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49) “경북도, 다문화 학생 급증...커지는 혼란 어떻게 해결할까”, NEWSIS, 2018. 10.12

50) 위 기사, “경북도, 다문화 학생 급증...커지는 혼란 어떻게 해결할까”

는 점, 5) 외국인 학생 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 학생 간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어 소통, 문화 차이에 따라 해결하기 상당히 복잡하고 들어가는 시간도 2배로 든다는 점, 6) 학부모에게 알리는 각종 안내문 등을 러시아어 등 중앙아시아권의 언어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할 인력이 없다는 점 등을 호소하고 있다.⁵¹⁾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일대도 고려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와 더불어 노무문제, 자녀교육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동북아평화연대의 관계자들도 토로하듯이, 고려인 후세들의 접근성을 위해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구 광희동 인근에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교육청이든 서울특별시든 건물의 임대나 대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 시설을 활용하면 가장 좋지만 방과 이후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점이 난제이다. 건물 임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는 듯하다. [표 3-2]에서 알 수 있듯이 사할린 한인과 비교했을 때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고려인들의 처우가 매우 저급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차 면담조사 대상자인 박000 여사 및 최0000 여사와의 면담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인들이 한국 생활을 희망하는 것은 대체로 돈을 벌기 위해서가 많고, 오래 정착한 경우에는 슈퍼를 경영하는 등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고려인 대부분은 H-2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전문지식 없는 단순노무 중심의 직업에 종사한다.

일찍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경우, 이후 이주해오는 고려인들에게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례가 있다. 최0000 여사가 임금 체불을 겪으면서도 공식적인 기구나 단체의 도움을

51) 위 기사, “경북도, 다문화 학생 급증...커지는 혼란 어떻게 해결할까”

얻기보다 아는 지인인 박OOO 여사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서울지역 고려인들은 안산지역처럼 밀집된 정착촌을 형성하기보다 형편에 맞는 월세를 중심으로 분산되어 거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주택 거주 가격 부담이 커서 대규모의 저렴한 정착촌이 형성되기 어려운 사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지역(CIS)과 더불어 가장 많은 고려인이 국내로 이주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이다. 사할린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러시아 국적 고려인이 국내로 이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실태와 더불어, 유학을 통해 대학교육 후 취업하여 직업을 가지게 된 교포 4세와 초등, 중등학교의 학령기에 있는 교포 5세의 한국생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차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2018.08.13.).

면담 대상자는 (사)동북아평화연대의 한국어 교실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OO(고려인 4세, 국적: 러시아, 38세, 교사)와 그녀의 아들 2명(11세, 14세)이다. 면담 대상자와 유선 통화 후 사전에 설계한 설문지를 서면으로 전달하여 인터넷 메일로 답변서를 받은 후, 유선 전화 통화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설문지 및 답변내용을 정리한 것이다.⁵²⁾

조OO는 러시아 지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후 한국에서 고려인과 러시아어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실의 한국어 강사로 취업한 후 한국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재외동포이다. 학령기의 두 아이를 한국 학교가 아니라 러시아대사관 학교에 취학시키고 있으면서 두 아이의 정체성 문제와 한국어 언어문제 및 한국생활 적응에 고민이 많았다.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교포 4세와 5세는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언어문제와 한국인들의 고려인에 대한 편견이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하였다.

52) 연구보고서 후반부에 인터뷰 내용을 전면 게재하였음.

조OO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고급 인력으로 월평균 소득액도 고려인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한다. 그녀는 러시아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교육원에서 일하면서 한국 정보를 상당히 많이 습득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이주를 결심하였고, 대체로 만족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다만 자녀 교육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듯하다.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고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아 결국 국내 학교가 아닌, 러시아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그 학교는 학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러시아로 돌아가 인정 시험을 치러야 하기에 이중의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조OO는 이러한 부담을 지더라도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차선의 선택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요구 조건도 아동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확대해주는 것이었다.

앞서 경주의 초등학교를 거론하였는데, 그곳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숫자 이상이 되어버린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육보다 원래 사용하던 러시아어 등을 사용하면 '언어의 섬'을 유지하면서 교육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집단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소수의 경우에는 외톨이로 지내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교사의 수도 적거니와,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내려가서 근무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적은 것도 문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조OO 같은 이주 고려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고려인들끼리 도움을 주고 있는 내용을 물어보았을 때,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통역해주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려인 모임이나 고려인 단체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의 장학생으로서 비교적 여유 있게 학업에 열중하였던 그녀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고려인들의 모임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듯하다.

04

이주 고려인에 대한 대책 및 제언

04 | 이주 고려인에 대한 대책 및 제언

안산 외국인주민센터의 외국인 거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까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 1, 2위 순서가 중국, 베트남 순이었는데 2012년부터 역전되어 중국, 우즈베키스탄이 되었다고 한다.⁵³⁾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출신의 입국자를 파악할 때 고려인을 따로 구분해서 그 숫자를 헤아리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입국자들이 H-2 비자와 F-4 비자임을 감안하면, 고려인들이 안산으로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소련에서 분리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스스로 ‘카레이쯔’(한인)라고 부르고 그렇게 행동했다.⁵⁴⁾ 우리와 같은 한민족으로 살아가다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시 유민으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고려인 35만여 명을 위해 정부는 재외동포법, 고려인특별지원법 등을 개편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동포문제, 통일문제, 노동인력부족 문제, 모국으로서의 역사적 책임문제 등 다양한 한국사회 문제들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우리 정부가 하루빨리 인식해야 하며, 고려인을 대할 때 우리의 필요에 의한 활용 대상이 아닌, 그들의 모국이라는 책임의식과 인도주의 정신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⁵⁵⁾

광주광역시, 안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특별시도 증가하는 이주 고려인들의 숫자에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여러 제언이 아무리 유효하

53) “고려인 이주 150년...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의 현황과 과제”, 뉴스에듀, 2013.12.03

54) 김승력, 2015, “국내체류 고려인을 위한 고려인 특별법 개정안의 현황과 전망”, 「이슈브리프」, IOM이민정책연구원 No.2015-16

55) 위 기사, “고려인 이주 150년...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의 현황과 과제”

다고 해도, 결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서울특별시 조례를 제정해 고려인들의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제언들은 조례 제정을 상정한 상태에서 가능한 지원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평화연대의 설문조사, 그리고 이 연구팀의 논문 분석 및 개별 인터뷰 등으로 고려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한국어 능력 함양을 지원해야 한다.

의사소통능력은 일상생활, 취업활동 등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 조건으로 학교 및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활 사이클별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조건일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고려인은 기본 의사소통능력 부족으로 단순노동,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각종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언어문제 때문에 이주 고려인들은 자신감 결여, 취업의 한계, 사회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언어 문제로 가정 내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부모 모두 취업으로 집에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로 입국한 이 빅토리아(40)씨는 앞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 거주하다 집안 사정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서, 5년여가 흘러 다시 국을 찾았지만 긴 시간 동안 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려 또다시 어려움을 반복 중이라며 “한국어만 할 줄 안다면 살기 편한 나라”라고 언급한 바 있다.⁵⁶⁾

경주 초등학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도 입학 학생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고려인 자녀들이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 귀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56) 이경엽, “운명처럼 받은 조국에 홀대받는 ‘유랑자 고려인’”, skydaily, 2017.04.14

또한 이 연구팀이 인터뷰했던 조OO의 자녀들의 사례처럼,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고려인 자녀들이 러시아대사관에서 운영하는 비공인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해당 가족에게는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한국어 특별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구상되는 것이 필요하다.

(1) 학생

- 한국어 수업 공간 확보: 서울시교육청과 연계
- 언어별 강사 인력풀 구성
- 1~2학기 한국어과정 운영 및 방과후 학교 운영
- 한국어기본과정 중점학교 지정을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협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점학교 지정
 - 서울특별시: 강사, 운영 인력, 시설 등 지원

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

(2) 성인

- 휴일반(토·일요일반), 야학 등 운영체계 구축 지원
 - 거주 지역 또는 일터 중심의 한글교실 운영
-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결국 접근성과 시간대가 중요하다. 이주 고려인과 그 후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집 근처에 있어야 하며, 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낮 동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며 주말에도 일을 나가야 하는 고려인들의 현실상 그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이 퇴근한 이후나 고려인 후세가 학교를 파한 방과후 수업 등 고려인들

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대의 한글학교 운영이 시급하다. 한국인 교사와 더불어 통역 가능한 외국인(혹은 고려인) 교사도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려인 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이러한 센터의 역할은 노무지원, 문화지원, 정보교환,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생활지원으로는 단순 일용직 근로환경에서 파생되는 제반 노동문제와 생활 법률, 분쟁 조정 등 각종 사건사고 상담을 위한 노무 등 관련 법률 전문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문화 지원으로는 서울거주 고려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전국고려인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⁵⁷⁾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성 있는 책임감을 지닌 센터가 필요하다. 또한 이 센터를 이용해 고려인 사회가 연계 되면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거점이 구축되는 것이다.

현재 한두 개의 사설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번역 및 의료, 장례 등도 공식 센터가 지원해야 한다. 이는 앞서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사할린 한인의 처우와 비교해보면 명확해질 것이다.⁵⁸⁾ 기초노령연금, 의료지원 등을 공식 센터에서 진행한다면, 그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 고려인들이 센터에 등록하고 센터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임대아파트 지원이야말로 숙원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물가가 비싼 한국에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경우 돈을 저축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 사할린한인의 처우에 등장하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면 이주 고려인들은 한국 사회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불만이 사그라질 것이고, 국내 정착을 위한 기초적인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다.

57) 현재 '한국고려인회'라는 온라인 모임이 있지만, 거의 폐쇄상태이다.

58) 보건복지부, 「2018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사업 안내」(2018년 1월)

세 번째는 고려인 관련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동북아평화연대 등 고려인 지원 사업단체들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동북아평화연대는 각종 기부금과 후원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고려인 후세들에게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단체들을 연계하여 관민협력 하에서 일관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체계적인 구축을 통해 각 단체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으며, 지역별 분담과 실행도 가능해질 것이다.⁵⁹⁾

아울러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이러한 단체들의 요원들을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안정적인 직업은 이주 고려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 단체에서 일하는 고려인들을 핵심 역량 인재로 활용한다면 센터의 인지도와 책임감이 향상될 것이다.

네 번째는 고려인 정착을 위한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어교육, 생활 및 문화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언어(한국어와 러시아어 등) 구사 능력을 갖춘 인력풀을 구성해야 함은 계속 지적인 바 있다.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특별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조OO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면서 고려인 학교의 교사로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고려인들의 국내 정착을 앞당기고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이는 결코 새로운 방법이 아니다. 이미 ‘다문화 서포터즈’가 활동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이 내국인에게 요리 강습을 하고 있기도 하다.⁶⁰⁾

59) 이미 예전부터 지적되어온 사항들이다(한승준 외, 2009, 「아시아국가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정책추진체계 연구」, 한국어성정책연구원, 187~190쪽).

다섯 번째는 한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고려인 4세, 5세들의 소외, 격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⁶¹⁾ 한시라도 빨리 고려인 이주사 및 생활사, 독립운동사 등 고려인의 역사를 정리하고, 독립운동가 후손찾기 사업 등으로 고려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기념사업을 전개(지원센터 내에 고려인 역사관 개설)하여 이주 고려인과 그 후세들이 민족의 역사와 본인들의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김새는 똑같지만 어투, 이름 등의 이유로 ‘한국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 이들은 태어난 국가와 고국을 연결할 수 있는 거머못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인 것이다.

2017년 9월 2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나는 고려인이다’란 대규모 공연이 열렸는데 ‘1937년 연해주부터 2017년 광주까지 고려인 예술가들의 삶과 사랑의 대서사시’라는 소개에 어울리게 일제강점기 연해주에서, 1937년 소련정부의 강제이주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의 조국 한국으로 유랑하는 고려인들의 처절한 삶을 노래와 춤, 시와 극으로 표현했다.⁶²⁾

‘고려인’은 ‘한국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고려인들의 처절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인도주의적 차원, 아니 망국과 식민지 시절에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끌려간 우리 선조에 대한 예우와 보답 차원에서라도 고려인들의 법적 지위와 자긍심 마련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

60) 송하성, “베트남 선생님께 직접 배우는 월남쌈은 달라요, 광명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전문강사로 나서는 요리교실 인기”, 오마이뉴스, 2018.07.13

61) 지벡 비추이노바, 2017, “국내 고려인 이주자의 사회적 통합 현황”,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석사논문, 참고할 것.

62) 김영집, “고려인은 ‘한국인’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오마이뉴스, 2017.09.04

여섯 번째는 한국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기구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앞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고려인들이 지인과 개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보를 얻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한국어 중심의 인터넷 사이트 일변도로 이용하기에 상당한 곤란함이 있다.

더욱이 이주 고려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주요 밀집지역은 있지만 네트워크는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별로 수립된 지원기구(글로벌센터 등)도 상당한 한국어 실력이나 사회 적응력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한 센터는 비즈니스 계열의 수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숫자도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경제 수준이 상급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통계에서 보듯이 고려인들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고려인들이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사이트로 통합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 사이트는 한국(역사와 문화)소개, 한국생활(법) 안내, 지역네트워크 소개가 위주가 된다. 또한 한국생활 적응 과정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고, 필수적인 각종 홈페이지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언어는 한글, 러시아어 외에도 고려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 등을 이용해야 한다. 고려인 사회를 위한 정기적인 소식지 발행도 시급한 현안이다.

두 번째 밀집 거주 지역에 사회통합 예산을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다. 고려인의 언어교육을 지원할 경우, 시설과 시간대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시간을 노동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여겨 해당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박OOO, 조OO 같은 핵심 요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만들고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핵심 요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으로 임명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고려인 지원 및 사회통합 전담 조직을 지자체별로 설치하고 정확한 실태조사 및 요구사항을 수시로 접수해야 한다. 아직은 기초적인 실태 조사도 없는 실정이다.

일곱 번째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고려인들은 자녀의 부모동반 입국자유화가 인정된 이후 고려인 청소년들의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정부의 법령에서 복지지원과 서비스 대상에서 고려인 청소년은 제외되고 있다. 고려인들의 법적 지위가 하루라도 빨리 안정화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중도 입국한 고려인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현상이 해결되어야 한다. 고려인 4세~5세는 부모를 따라 이주해 왔지만 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신문보도나 조OO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예측되는 현상이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는 비슷하지만 언어와 이름이 달라 내국인 학생들에 의한 따돌림 등의 차별을 받고 있으며 학교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 학교에서 탈퇴하여 러시아 학교 등에 입학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사례도 있으며, 이후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결국 국외로 다시 빠져 나가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체류 안정을 위한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F-4(기술자격증 취득) 비자 전환을 위한 한국어교육 비용, 사비로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등이 발생하고, 빈번한 출입국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재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고용의 불안정으로 F-4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더라도, 관련 기술 취업이 어려워 단순 노무직(식당, 공장 등)이나 시간제 업무 등의 불법취업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려인 자녀의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지원할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다른 재외동포와의 형평성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외국인과 이주민 관련 법, 조례 등에도 고려인 관련 부분이 추가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재한 고려인 자녀가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뿐인가? 재외동포재단법은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자도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도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고려인 후세들이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겪는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는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평화연대, 안산의 '너머'에서 하고 있는 각종 한국문화 교육은 학생들에게 웃음과 만족감을 선사한다.⁶³⁾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을 공교육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경주 초등학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익숙한 언어 집단끼리 모이고, 한국의 교육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거나 적응하리란 보장을 할 수 없음은 충분히 예측되는 일이며 사회적 비용문제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고려인 후세들이 일정 기간 공교육과 기술교육을 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는 고려인에 대한 우리(한국인)의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고려인에 대한 내국인의 동반자 의식이 없어 고려인들은 모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있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노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⁶⁴⁾ 내국인은 일반 외국인보다 고려인 주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듯하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등, 말투가 이상하다는 등, 한국어를 왜 하지 못하는가 등이다. 고려인들은 단순노무직을 전담하는 등 고생을 하면서도 내국인에 비해 임금, 자녀 양육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반자 의식과 민족의 동질성 확대를 위한 공

63) 동북아평화연대(www.peaceasia.or.kr)를 방문하거나 관련 동영상(고려인)을 검색할 것

64) 고려인 80년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청와대 민원실, 2017.09.04)

동체 행사가 확대되어야 한다. 동북아평화연대에서 진행하는 여름학교처럼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국단위의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다.⁶⁵⁾ 또한 다문화자녀보육료에 해당하는 지원이 재외동포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지원도 가급적 통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어느 곳에 정착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아홉 번째는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한다.

1937년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지만, 소련의 언어 정책 속에서 고려인들은 점차 한국어를 잊어갔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중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정착기간이 오래였기 때문일 것이다. 언어 능력이 떨어진 그들은 정착과 주거문제, 취업문제, 육아 및 자녀교육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새로운 이주자가 기존에 정착한 고려인 이주자라는 개별적인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공식적인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려인을 지원하는 ‘종합센터’, 어린이집, 고려인 아동을 지원하는 한글학교 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열 번째는 특화된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아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에는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고려인 신부의 사례도 적지 않다.⁶⁶⁾ 고려인 여성과 한국 남성의 혼인 이후 신부 측 가족의 후속적인 한국 이주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한 시점이다.

65) 동북아평화연대, 한강서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여름캠프, 매일경제, 2018.08.14

66) 김경학, 2014,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4호, 270쪽.

앞서 지적했듯이 조부모, 가족, 친척의 도움을 받아 국내로 이주하는 고려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규모 공동체 속에서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밀집된 거주지를 형성하며 살아가므로 이러한 고려인 신부 측 가족과 친척에 관한 정보 제공, 한글 교육, 주택 제공, 취업 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 양기호, 2010, “다문화정책과 밀집지역 연구의 중요성”, 「국토」, 9월호
- 민성희·박정호, 2013, “다문화가족의 공간적 분포와 국토·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국토정책 Brief(435)」
- 김경학, 2014, “중양아시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 연구」 제17권 제4호
- 김승력, 2015, “국내체류 고려인을 위한 고려인 특별법 개정안의 현황과 전망”, 「이슈브리프」, IOM이 민정책연구원, No.2015-6
- 민성희·안룡진·박정호, 2015, “인종별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분포 특성”, 「국토연구」, 12월호
- 자백 비추이노바, 2017, “국내 고려인 이주자의 사회적 통합 현황”,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석사논문
- 한승준 외, 2009, 「아시아국가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정책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외교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690호, 2013.03. 23.)
- 통계청, 「2015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시험조사-조사원 사전 교육 교재」(2014. 6)
- 재외동포재단, 「2015 재외동포현황」 및 「2017 재외동포현황」
- 재외동포재단, 2015,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 현황 조사Ⅱ」
- 보건복지부, 「사할린동포영주귀국지원」, 2018년 1월
- 안산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18.01.08, 제2148호)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18.04.01, 제5078호)
- 외교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년 8월호
- 법무부, 201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부록

설문자료 및 기타 자료

I. 고려인 대면 설문조사 결과(2018. 8. 1)

- 참석자: 김우경, 강성주
- 면담자: 박000. 박000씨의 딸(20대), 손녀(8개월), 최0000(60대)
- 면담일: 8월 1일 16:00~18:00
- 7월 24일 면담에서 약속한 대로 4~6명의 고려인을 섭외하면 연구모임에서 작성한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 결과를 받을 예정이었음
- 8월 1일 설문에 참여한 고려인의 수가 적었으며,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읽고 답할 수준이 안되어 기존의 계획대로 설문지 형식보다 2차 면담 형식으로 진행함
- 이른 저녁을 먹으면서 면담형식으로 진행된 설문내용임(주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최0000가,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박000씨의 딸이 발언함)

1. 체류 비자는?

- 박000 여사는 교포 3세로서 F-4 비자를 가지고 있음
- 박000의 딸(F-5)과 손녀: 고려인 4세, 5세
- 최0000: 교포 3세, 대학교 교육을 받은 것을 증명받지 못해 H-2(방문취업) 비자로 입국
- 주변 고려인들은 H-2비자(단순 기능직일만 가능함)가 많음, 비자로서 F-4 비자는 장사 등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에 훨씬 선호하고 있음
- 국적취득을 가장 선호하고, 그다음은 영주권 획득, 귀국 순으로 선호함

2.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 연령대, 활동분야?

- 주로 빌라 등에 전세, 월세로 살고 있음
- 서울에는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없음(주로 광희동, 장충동, 신당동 등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음)
- 서울에 살고 있는 고려인끼리 교류는 많지 않음(서로 일하느라 바빠서 잘 만나보지 못함,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끼리 카톡이나 문자, 전화를 통해 교류하고 있음)
- 서울 외의 지역으로는 오산 안산, 아산 등 공장지대에 밀집되어 살고 있음
- 주로 하는 일은 H-2의 비자인 경우 식당, 청소, 공장, 요양병원(간병인), 당일치기 노동(젊은 층이 선호함)

3. 본인의 소득? 결혼 및 자녀?

-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비용은 감당되지만 돈이 모이지는 않고 있음

4. 이주 전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 습득 통로 및 내용은?

(매체, 지인, 공동체, 교회 등)/ (고려인의 권리와 의무, 법과 상식, 한국어)

- 주로 먼저 이주한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공식프로그램보다는 인터넷이나 SNS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이주하고 있음. 한국 입국 전에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음

5. 이주 후 고려인의 한국생활 만족도는?(기대했던바, 취업, 교육, 의료, 생활 등)

- 우즈베키스탄에서보다는 나음
- 돈을 벌게 해주어서 고마움

6. 이주 후 한국생활에서 좋은 점과 힘든 점은?(그 이유는?)

(출입국문제, 의식주 문제, 취업, 자녀학업, 임금, 의료 및 금융, 공공기관 이용 및 상담이용, 외로움, 차별대우, 범죄피해 등 //준비부족, 지원부족, 언어, 경제적 빈곤, 정책부재, 한국사회와의 소통 및 교류 부재 등)

- 최0000: 월급이 2개월간 체불되었음

- 다른 외국에서(영어권 등) 귀국한 동포에 비해 고려인에 비호감을 보이고 있음
- 사할린 지역 고려인 2,3세에 비해 CIS 지역 고려인들은 큰 혜택이 없음(예: 집 제공 등)
- 안산 지역 등은 아이 보육수당으로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서울지역 고려인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음. 어린이집에 보낼 때에도 자치구별로 차별하고 있어 서운함

7. 본인이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의논하고 도움을 받는 방법은?

- 임금체불이 가장 큰 어려움이며,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한국인들은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말을 잘 알아들으면서도, 고려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을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고 탄청을 부리는 경우가 많음
- 본인이 주로 해결하는 편이며, 말이 잘 통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음

8.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은?

-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3개월 과정에 등록했다가 일을 위해 중단한 경험이 있음
-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음
- 한국학교에 다니는 4, 5세는 우리말을 잘 몰라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고 흥미를 잃고 있음. 별도의 반을 편성해 러시아어와 우리말을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보조 교사로 하여 우선 소통을 통해 흥미를 느끼게 유도해주면 좋겠음

9. 정책 당국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 고려인 4, 5세의 비자 문제의 해결을 통해 정착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달라
- H-2 비자는 당일치기 형태(일당제, 혹은 일박제)보다 안정된 고용(월급 형태)의 일자리를 소개해 달라
- 자녀가 학교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교사를 배치해 달라
- 고용의 안정을 통해 (고용보험) 병원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 서울시도 안산시처럼 육아, 아동수당을 고려인에게도 지급해 달라

II. 2018년 서울시 정책 연구를 위한 면담 설문지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에 대한 답변은 서울시 정책 연구에만 사용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안에 유의하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답변하시되, 고려인 전반적인 의견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연구팀: 사학고래회/강성주(월계중 교감)

1. 인적사항

성명	조OO	나이	38
교포	고려인(4)세	체류비자	F-4
이주(입국)연도	2012년	직업	교사
월 평균 소득액	2,500,000	가족 사항	자녀 2명
주 사용 언어	한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수준	상

2. 이주를 결심 한 주요 목적(이유)은 무엇인가요?

유학입니다.

3. 이주 전 한국(생활)에 대해서 정보를 얻은 방법 및 내용은 무엇이었고, 이주 전에 준비한 내용은 이주 후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인터넷 정보, 아는 사람의 소개 등등)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웠을 때, 한국교육원에서 일했을 때 한국에 대한 정보(의식주, 문화 차이 등)를 얻었습니다.

4. 서울 지역의 경우 이주 후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동)은 어디인가요? (고려인 집단 거주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을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5. 한국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기대했던 생활, 취업, 교육, 의료, 자녀양육 등)

자녀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6. 한국 생활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점	<i>생활이 안전하고, 사람들이 친절합니다.</i>
------	------------------------------

7. 한국 생활에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항목 중에서 3~5가지 정도 선택하여 작성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자문제, 출입국문제, 의식주, 취업, 자녀 학업, 임금, 의료 및 금융, 공공기관 이용 및 상담이용, 외로움, 차별대우, 범죄피해, 이주준비부족, 자치구 및 정부의 지원 부족, 언어문제, 경제적 빈곤, 한국인과의 소통 및 교류 부재 등

힘든 점	자녀 학업	<i>언어 문제로 인해 아이들이 한국학교에서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외모가 비슷합니다만 소통이 잘되지 않고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잘했습니다만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항상 놀렸습니다. 결국 한국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러시아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i>
	언어 문제	<i>한국에 오기 전에 본인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같은 한국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i>

8.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고려인들끼리 도움을 주고 있는 내용은?

소통이 잘되지 않을 때 통역해주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임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나요?)

고려인 모임이나 고려인 단체에서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9.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정부, 서울시, 자치구 혹은 사설기관의 지원 프로그램과 내용은?

저는 재외동포재단 장학생으로 국내 대학원에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 남부 글로벌센터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었는데, 한국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 앞으로의 본인(고려인)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 정부, 서울시, 자치구 등에 요청하고 싶은 지원 내용은?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입니다.

※ 다음은 고려인 4~5세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명	김OO	나이	14
교포 구분	고려인 (5)세	재학 학교	러시아 대사관학교
비자	F-1	한국어 정도	중

성명	김OOOO	나이	11
교포 구분	고려인 (5)세	재학 학교	러시아 대사관학교
비자	F-1	한국어 정도	중

11. 자녀는 한국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나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12. 자녀의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어 문제로 인해 한국 친구들이 없습니다.

13. 재학하고 있는 학교생활은 한국사회 적응 준비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러시아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한국사회 적응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4.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내용은?

동북아평화연대 주말학교 한국어 수업입니다.

15. 앞으로 행복한 자녀의 한국 생활을 위해 정부, 서울시, 자치구/혹은 학교에 요청하는 내용은?

한국어 교육, 취미 교육(운동, 미술, 음악, 컴퓨터 등), 역사문화 체험입니다.

Ⅲ. 안산 고려인 문화센터 너머 김영수 인터뷰 자료

안산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설치 시기는 언제인가요?

설치하게 된 이유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국내 거주 고려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자자체나 정부의 지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1) 너머(홈페이지 내용)⁶⁷⁾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는 중앙아시아의 경제적 불안 등으로 인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안산 지역의 경우 미등록거주자를 포함하면 약 1만 2천 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고려인 동포에 비해,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정부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어떤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37, 전화번호 : 031-493-7053, 홈페이지: www.jamir.or.kr/

너머는 국내 거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보며, 특히 **안산 선부동(땃골) 같은 고려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거주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체류와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그 목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성인한국어, 미래세대, 청소년 교육사업 및 생활상담, 노동·체불상담 등 지원 사업 그리고 특별사업으로 비자 등의 체류 문제와 국내 정착에 대한 지원, 동포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주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너머의 노력들은 역사적 책임의식에서 출발하였지만,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의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2) 국내 고려인 동포 현황

고려인 동포의 국내 입국은 1999년 12월 재외동포법이 발효되었지만, 중국, 구소련지역 및 일본거주 동포가 제외되었다가 이후 2006년 2월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라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구소련 붕괴 이후 고려인의 근면성과 성실함을 대변했던 집단농장은 급격히 와해되었고, 소련 국민에서 지역 국가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고려인들은 저임금과 실업의 상태로 유민화가 가속되었다.

▶ 제도적 체류 환경(체류비자)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는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의 비자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불안정한 체류문제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또한 동포 3세대까지만 인정되는 재외동포법 규정으로 현재 대부분의 미성년자녀에 해당하는 4세대 이후의 문제는 근본적인 법적 해결이 필요하나 2019년 6월까지 한시적 조치로 체류가 허가된 상태이다. 현행 영주권취득제도의 완화는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들의 사회적 제도적 처우 개선의 첫 번째 과제이다.

▶ 고려인 미래세대(교육, 보육)

급증하는 고려인 자녀들의 체류현황은 출입국자료로는 파악이 안 되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고려인 자녀 대부분은 부모를 따라 중도 입국한 자녀들로 대부분 저소득층이며, 한부모 가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정부의 지원 대책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은 보육료를 고스란히 지급해야 하며, 이후 부모 귀가까지의 돌봄이

안되 동반 입국한 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고려인 노인들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 언어생활

언어소통의 불편함은 다른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 이상으로 스스로 위축되고 자존감마저 잃을 정도로 심리적 위축감이 생긴다고 했다. 언어 문제로 취업처를 비롯 각종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휴일 특근과 장시간 노동의 일용근로가 대부분으로 한국어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고 있다.

▶ 의료, 복지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모국생활 중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가 공적인 의료지원체제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일용근로 형태로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월 10만 원 이상의 지역보험료는 최저임금노동자로서 큰 부담이다. 또한 입국일로 부터 3개월 이후 가입 조건 등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지 못해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져 심각한 보건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3) 고려인 동포의 정착을 막는 문제들(2017년 6월 16일)

고려인 동포는 현재 안산 지역의 8천명 포함 국내 최소 4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국인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자민족 우선 정책과 경제적 불안 등으로 국내 입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만 동포로서 가능할 뿐 국내에서 어떤 법적 지위도 지원도 전무한 외국인 신분으로, 비자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유랑 민족입니다.

너머는 가족 단위로 모국을 찾아 이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가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상담 지원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비자 기한 제한의 문제
- 1945년 이후 동포 세대 인정 기준에 따라 현재 고려인동포 자녀들이 동포 인정이 안 되고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하는 법적인 동포 기준의 문제
- 대부분이 파견업체 일용직 근로자로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현실과 부부간 피부양 등록이 어려운 서류제한 문제

- 고려인 동포 자녀들의 언어문제로 인한 학습지체와 진로의 문제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의 문제들을 지역 및 각 기관과 협력, 강구하여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에서 외국인이 아닌 새로운 정착 국민으로 살아가며, 더불어 한국 사회가 적극적인 사회통합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남은 노력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막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

- 비자 기한 제한의 문제

너머가 위치한 안산 단원구의 경우 6천여 명의 고려인동포가 거주.

방문취업비자(H2)는 러시아를 제외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국 동포에게 허가 되는 3년 기한의 체류 비자이다. 비자기한 3년이 지나면 정규직 근무자에 한해 1년 10개월 연장 가능하여 최대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다.

고려인들은 언제 법이 바뀔지 몰라 재입국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동포비자(F4)나 영주권(F5)을 받고 싶어하지만 언어, 자산, 수입 등의 장벽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 자녀세대인 동포 4세대는 동포가 아닌 외국인

출입국 동포 기준은 1945년 이전 출생을 1세대, 이후 출생을 2세대로 정하며, 3세대까지만 동포로 인정된다. 현재 자녀 세대는 4세대들로 미성년 방문동거비자로 부모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성년이 되는 19세부터는 유학비자 등으로 연장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신분으로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다.

김올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체류를 위해 어학당 등록을 하여 체류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 의료보험 적용의 문제

고려인동포도 국내에서 외국인 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입국 후 3개월 후에만 지역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의료문제는 어떤 대책도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례로, 최근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져 응급실로 가서 검사,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이 되지 않아 수천만 원 대의 병원비 청구가 나왔고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고, 심지어 이러한 부담 때문에 병원을 못 가고 온 지 1달 만에 집에서 사망한 사례도 있다.

보험금 부담도 외국인기준으로 월 10만원 정도이며 가족피부양에서 서류불인정의 문제로 배우자 등록도 안 돼 보험금 이증부담이 되고 있다. 대부분 파견업체를 통한 일용직 근로가 대부분인 고려인들은 보험금 부담으로 대부분 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다

- 고려인 동포 자녀들의 학습과 그들의 미래

언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 아이들과 같은 경쟁을 해야 하며 입시에서 소외되는 아이들.

사례로, 홍블라드는 중학교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왔으며, 한국에서 3년간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지만, 국내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외국인특례입학에서 제외되며 일반입시전형에 따라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19세부터는 미성년동반비자도 만료되어 입학할 경우 국내거주가 불가하다. 고려인 자녀들의 경우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언어, 문화적으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세대이다. 이들에 대해 길을 열어주는 것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국력이 될 수 있다. 그 외 19~24세 연령의 비자발급 제한의 문제, 동반비자가 자녀와 배우자에게만 가능하여 친어머니임에도 함께 국내에 거주할 수 없는 문제 등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들에게 풀어야 할 제도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4) 조남성(2017-06-20)

국적명		계	고용허가	방문취업(H2)	결혼이민자	유학연수	전문인력	난민	방문동거(F1)	영주	기타	외국국적동포(F4)
		6,234	231	3,366	57	20	3	52	470	7	10	2,018
		100%	3.71%	53.99%	0.91%	0.32%	0.05%	0.83%	7.54%	0.11%	0.16%	32.37%
우즈베키스탄	69.62%	4,340	215	2,963	37	16	2	24	391	5	9	678
한국계 러시아인	20.44%	1,274	-	12	7	-	-	-	4	1	-	1,250
카자흐스탄	5.07%	316	5	180	5	2	-	24	38	1	-	61
키르기스스탄	2.33%	145	11	88	6	2	-	1	14	-	1	22
우크라이나	2.10%	131	-	106	-	-	1	2	19	-	-	3
타지키스탄	0.45%	28	-	17	2	-	-	1	4	-	-	4

자료: 출입국 외국인주민센터자료-안산단원구 고려인동포

이런 글을 보면 답답하고 슬퍼집니다.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마땅히 보호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 동포들을 차별하고 냉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연해 주로 이주를 했던 가난해서 이주했던 모두가 그 시절 나라가 힘이 없어 이주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잘사는 선진국의 동포들과 구소련 내지는 재중동포처럼 우리와는 체제가 다른 역사를 가졌던 동포들을 차별하는 것도 이해할 수도 없고 3세까지는 가능하지만 4세는 체류자체에 제한을 둔다는 말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세가 됐던 5세가 됐건 그들의 부모가 한민족이라면 당연히 거주와 교육, 의료, 복지에서 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보상을 못 해줄망정 적어도 체류와 교육, 취업의 기회는 제한을 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한다면 국적을 부여해줘야 하고 탈북민에 준해서 국가는 이들을 이 땅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임시정부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적통임을 자부하는 한국정부는 마땅히 구소련 동포들을 포용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의 재외동포수용정책을 따르지 않더라도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이 땅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재외동포들을 차별하거나 이방인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적 양심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한국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위정자들이 조국에 들어와서도 고난에 시달리는 고려인 동포들의 처지와 현실에 관심을 두기를 바라며 조국의 발전에 따른 과실을 이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문재인 대통령께 올리는 글(너머 홈페이지, 2018. 7. 9)

문재인 대통령님께,

현재 국내에는 전체 50만 고려인동포의 약 1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의 고려인들은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유랑의 어려움에 처했고, 많은 동포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동포법의 한계로 고려인동포의 국내 체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로 지금까지 한인으로 살아온 고려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모든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현 상황과 새 시대에 발 맞출 수 있도록 동포법이 새롭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 살기 위해 귀환하고 한국 교육을 받고 있는 고려인 새세대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한국인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갈 수 있도록 받아주십시오.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이주해 한국 교육을 받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들은 다시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제도적으로 거듭나고 또한 이렇게 거듭난 의식은 동북아를 이끄는 큰 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6) 너머의 주요 사업

사업 1. 지역 네트워크 사업

1. 교육사업

- 1) 거점지역 한국어교육, 아동청소년 방과 후 교실
- 2) 상담 통합 교육: 법률(노무, 생활, 행정) 전문기관 연계

2.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 지역 및 전국모임 활성화사업
- 지역별 간담회: 지역 연계 기관과 협력 사업 구축, 지역 모임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마련
- 지역별 커뮤니티 행사지원: 바자회, 문화행사, 문화탐방, 자조모임(동아리, 지역 협의회 외) 지원

3. 전국 고려인 자조모임 (전국고려인 네트워크)

: 전국 고려인 협의체 구성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4. 긴급 지원 사업(의료, 생활 외) 전문기관연계

사업 II. 고려인 차세대 서포터즈

1. 장학 위원회: 우수학생, 취약층 자녀, 자원봉사 활동 그룹지원
2. 사업 위원회: 보육, 교육, 진로지도, 활동, 정책 제안, 고려인 청소년 포럼
3. 고려인 청소년 운영 위원회

사업 Ⅲ. 제도개선사업

- 고려인 아동 청소년의 체류 자격이 외국인으로 되어있어 성인이 되는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체류가 어려운 현행 동포법제도의 시급한 개정 필요.
- 고려인동포 국내 체류권 외 국내 체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개정 및 실행위 구성
- 국민 공감형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고려인 동포관련 입법화 추진 동력확보.

사업 Ⅳ. 센터지원사업

1. 교육 사업

1) 방과후교실

- 내용: 초등연령 및 미취학아동 대상 한국어,교과 및 예체능 / 아동저녁간식
- 시간: 월~금15:30~19:00 토요일15:00~17:00, 일요일17:00~19:00

2) 청소년교육, 멘토교실 운영 및 지원

- 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멘토수업, 토픽 및 한국어수업
- 시간: 월~금 19:30~20:30, 토요일 운영

2. 지원 사업

1) 상담 및 통번역지원

- 내용: 노동, 생활법률, 분쟁 조정, 사건사고 상담 - 노무, 법률전문가지원
통번역, 의료, 장례지원 등 긴급지원
- 시간: 월~금 10:00~22:00, 토 13:00~20:00

2) 지역 커뮤니티 지원

- 내용: 고려인 및 지역주민 성인동아리(한국고전무용, 러시아반, 자율방범대), 정기주민회의

및 기부물품나눔마을운영위. 각종 행사(한식, 바자회, 체육, 문화행사 탐방 등)

- 운영: 동아리 주1-2회, 한식행사 매년 4.5일, 체육행사 매년 9월, 마을잔치 및 바자회 연 3~4회, 탐방 연 2회, 정기마을운영위

3. 전시관

- 전시관 개방: 월-금 11:00~20:00 전시관 안내 및 해설

고려인생활문화 특별전시 및 이주역사강연

사업 V. 프로젝트사업

공동모금회, 경기교육청 꿈의학교, 재외동포재단 외

7)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고려인 선언문⁶⁸⁾

우리 - 고려사람은 한국의 영웅들과 영예로운 아들들(신채호, 안중근, 이동휘, 이범윤, 이상설, 최재형, 홍범도, 계봉우 외 많은 분들)의 후손입니다. 우리 고려사람은 연해주에서 “신한춘”을 개척하고 일제강탈자들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단체인 “권업회”와 “성명회”를 조직하고 “해조신문”등을 발행한 분들의 후손입니다.

우리 고려사람은 80년 전 스탈린의 탄압으로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었으나, 이곳의 사막과 메마른 초원을 개척하고 살아남은 분들의 후손입니다. 소련이 붕괴되자 우리 고려 사람은 또다시 큰 혼란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우리 고려인 가족들은 15개의 신생국 국민들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문제 및 주거문제와 문화적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반도는 이미 수십 년째 둘로 갈라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80년이라는 세월과 형성된 상황들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민족의 전통을 숭고히 지켜왔고 여전히 고려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국적과 태어난 곳을 다를지라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조국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68) <http://www.hmh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5>

우리 고려사람은 우리의 형제들 -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에게 호소합니다.

흩어진 우리 고려인 가족들을 통합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를 피를 나눈 형제 즉, 우리가 우리들의 뿌리인 역사적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동포로 인정해주십시오. 그리하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너그러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려 사람들을 동포로서 법적 및 사회적 지위를 긍정적으로 결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모국어와 모국의 문화 및 역사를 다시 잘 알 수 있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곳 조상들의 조국에서 가족이 함께 살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고려사람들은 근면함과 일에 대한 열정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고려사람들의 농업, 과학, 문화 및 예술 등 다양한 활동영역에서의 업적은 전체적으로는 모든 한민족의 업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획득한 것들이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합니다.

우리 고려사람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무너진 우리의 삶을 스스로 그리고 협력하여 새롭게 복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한인이라는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공고히 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이를 공부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살 것이며 대한민국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이 될 것이다.

임 이고리 외 고려사람(79인)

8) 너머 연혁 목록

2014

01.01

-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발족

02.01

- 고려인 지원을 위한 안산시민원탁회의 발족

- 예비중학생 대상 보충수업

- 동대문 너머 수업 시작
- 기초반 수업 개강
- 고려인, 새터민과 함께하는 대보름 척사대회(참가)

03.01

- 한양대 안산캠퍼스 앞 한글교실 개소
- 한국무용반 동아리수업 시작
- 주부치안봉사단 발족, 고려인 자녀 안심 귀가 활동
- 고려인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원 간담회(원미정, 김현삼 외)
- 고려인과 함께하는 안산 3.1 만세 기념식, 3.8 여성의날 기념대회 참가
- 안산 동화읽는 어른모임 토요 어린이반 개강
- 너머 운영위원회

04.01

-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시작
- 역사 문화 체험 천안 독립기념관 방문
- 고려인 현황 안산시장 방문 간담회
- 안산희망재단 MOU 체결
-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조문, 촛불집회 등 참여

05.01

- 안산시 평생 학습관 MOU 체결,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시작
- 일요일 한국어 수업 개강
- 고려인 특별법 개정 국회 간담회
- 고려인 학부모 간담회(격월 시행)

06.01

- 부모 상봉사업 기금 전달(희망해)

- 고려인 자녀 등교 버스 지원
- 우음도 생태 캠프
- 초등학생 건강검진 동행, 통역지원

07.01

- 안산 다문화 한민족 어울림마당 참가
- KBS 다큐공감 “땃골의 카레이스키” 촬영 협조
- 땃골 달시장
- 현대자동차 지원 청소년 아동 다문화캠프
- 초등학생 하교버스 지원

08.01

- 150주년 기념사업 오토갤러리
- 청소년과 함께하는 너머 여름 역사교실
- 경기도 지원 취약계층 어린이 돌봄 “엄마손 도시락 사업 진행”
- 토요일 어린이반 방학 특강(그림수업)

09.01

- NH농협 고려인 자녀 농촌 체험 캠프
- 국경없는 마을 안산월드컵 - 배구팀 참가
- 땃골 달시장

10.01

-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페스티벌 “We are the one festival in Ansan” 주관(4천여 명 참여)
- 주민 대상 생활 러시아어반 개강

11.01

- 고려인 자녀 태권도 시작

- 고려인 자녀 댄스반 시작
- 뗏골 운영위원회 발족
- 골든트라이앵글사업 강좌 시작(만들기반, 뜨개질반 등)
- 뗏골 달시장

12.01

- 안산 노동인권영화제 주최
- 안산 동화읽는어른모임 간담회
- 경기평생학습 어울림콘서트
- 안산자활센터 연계 취약계층 주택지원(4가구)
- 고려인 청소년 사랑의 몰래산타 참여
- 너머 송년회
- 농구반, 생활체육반 시작(신길고)

2013

03.01

- 고려인 뇌성마비 아기 긴급지원
- 남 발렌티나 페이스북 홍보 통한 모금
- 고려인 영화 '하나인' 관람(40여 명 참가), 지역여성의 날 행사참여(너머 교육생 이주 노동자 대표 참여)

04.01

- 아트 포러스 프로젝트 일요 문화교실 운영 시작(연극, 역사, 사진, 글쓰기)
- 안산 동화 읽는 어른 모임과 연계 주말 어린이반 시작
- 고려인 뇌종양 아이 긴급지원 모금 활동
- 서울 문화 탐방(80여 명 참가)

- 아리나 기금 1차 전달(160여만 원)
- 동아리 활동 시작(3개 그룹 -연극, 예술 교육(사진, 회화, 역사, 드라마))

05.01

- 안산 국제 거리극 축제(연극동아리 활동)
- 성북 다문화음식축제(중앙아시아 음식)
- 모스크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관람 및 수원화성 탐방(약 35명 참가)
- 최저임금 페스티벌 참가(너머 밴드 공연)
- 비정규실태 설문조사 사업실시(비정규 노동센터 연계)

06.01

- 다음 대학생 기자단의 고려인 “어린이 부모 상봉사업” 서명 청원 시작
- 전통혼례 두 쌍(용산역 주관)
- 한복 바자회(200여 점 판매)
- 리트머스 역사 교육 프로그램(독립기념관 탐방)
- 김샤샤 뇌종양 치료기금 전달(아고라 570만 원, 자체 모금 170만 원)
- 이주여성 노동 및 성희롱 관련 설문작업 준비(여성 노동자회)

08.01

- 동해탐방(90여 명 참가)
- 8.15기념 강화도 역사 탐방(마을 만들기 사업단)
- 리트머스 문화수업(댄스반, 드라마 외)

09.01

- 지역 문화축제 참여(너머 밴드 외)
- 한겨레 기획기사 준비
- 무연고 장례식(안산시민장례)
- 기초반 수업 시작

10.01

- 학예회 실시(회원 초대의 날)
- 다국적 어린이 축구대회(구세군 연계)
- 고려인 문제 관련 안산시민 간담회실시(시민단체 및 40여 명 참가)
- 장례식 지원(김로만, 허로만)

11.01

- 안산시민 원탁회의 시작
- 월 토반 신규개설
- 고려인 동포 땃골 잔치(바자회) - 300여 명 이상 참가

12.01

- 고려인 동포와 함께하는 음악회(안산 희망재단 외)
- 신동아 외 연합뉴스 땃골 고려인과 한글야학 너머 기사보도

2012

03.01

- 산재, 체불 임금 상담 및 지원시작, 단체 설립자 및 후원위원회 구성

04.01

- 고려인 안구암 아이 의료지원(아고라 및 의료단체 제안)
- 모국탐방여행 시작(총 4회 실시 연간 250여 명 참가), 운영위원회 결성

05.01

- 시민단체 '너머' 이름으로 개원식 및 총회 실시(300여 명 참가)

06.01

- 한글교육 주말 교육 및 초, 중 회화반 7Time 실시(70여 명)

07.01

- 방학 기간 고려인동포 아동 대상 한글 교육 및 돌봄 실시
- 안구암 아기 항암치료비 긴급지원

11.01

- 고려인사랑방 및 별별 상담실 개소, 김장나눔, 바자회

12.01

- 고려인 동포 중심 음악 동아리결성

2011

10.01 10월 선부동 한글야학 시작

12.01 총회 실시

IV. 박OOO씨 면담(2018년 7월 24일)

참석자 : 김병혁, 김우경, 박민역

대담자 : 박 OO⁶⁹⁾

장소 : 롯데피트인 내 식당(8층,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1) 비자문제

박 여사는 비자 문제가 노무현 정부 때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했음. 다만 고려인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문제를 얘기했음. 출생신고와 여권을 위해 출생한 지 1년 안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야 한다고. 한국 내에서 처리되면 좋겠다고 함

69) 박OOO 여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한 고려인임. 1997년에 한국에 와서 21년째 거주하고 있음. 현재 장충동에서 딸, 사위, 손주 2명과 함께 살고 있음

2) 주거 문제

고려인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이곳 중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함. 낮일 밤일 가리지 않고 일을 해도 돈을 잘 모으지 못한다고 함.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위 '고려인을 위한 시영 아파트' 제공도 좋은 방안일 듯함

3) 임금 체불 문제

박 여사도 21년간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함. 물론 최근에 이러한 체불현상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이와 같은 경우 동대문글로벌센터, 중구청과 같은 공식 기관에서 우즈베크어를 말할 수 있는 노무사 같은 존재가 있으면 좋을 듯함. 혹은 고려인 중에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식 채용해도 될 듯함

4) 자녀들 학교 문제

박 여사도 어린 손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 소수의 고려인 자제들이라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학교나 학급 편성이 필요할 듯함. 그를 위해서는 다문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물론 이러한 상황도 고려인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사로 임명하는 방법도 가능할 듯함. 현재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소수 몇 명의 아이들을 둔 가정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자녀를 우즈베키스탄 등에 남겨놓고 온 경우, 어느 정도 그곳 생활을 경험하여 귀국하고자 소망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부모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함. '시영 아파트'와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근처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러시아어 수업, 우즈베크어 수업을 비롯한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듯함. 교사의 수급도 국내의 고려인과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의 임용으로 해결하는 것도 방안인 듯함.

V. 고려인 80년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청와대 민원실, 2017. 09.04)⁷⁰⁾

문재인 대통령님!

고려인 1세대는 일본과 소련에 의해 망했습니다. 고려인 2세대와 3세대는 조국 대한민국에 외면당해 망해가고 있습니다. 고려인 4세대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추방되면서 망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1937년 1만 6천 5백 고려인이 사망한 고려인 강제이주 사건이 있는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류 어느 누구도 그 죽음과 억울함에 울어 주지 않은 참혹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 아직도 대한민국 차원으로 연구와 조사,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하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국민이 먼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안산, 서울, 광주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위원회를 만들고 고려인 특별법 개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픔에 전해철, 김경협 국회의원이 각각 고려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고려인의 손을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그래서 우리는 더 기쁩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 정부는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1919년 건국’을 들으며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차고 아픈 연해주 독립운동사와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사건이 이제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권업회, 성명회, 해조신문, 신한촌, 그리고 신채호, 안중근, 이동휘, 이범윤, 이상설, 최재형, 홍범도와 이들과 함께한 수만의 연해주 독립군들의 국내진공(역사학자 박 보리스)이 1907년 8월~1908년 12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당시 연해주 의병은 일본군과 총 1,722회의 전투를 벌였으며, 여기에 참가한 의병이 연인원 11만 3,948명에 달합니다. 이에 이어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후손은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사건으로 단 한 명도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인 3세대, 4세대가 한국말도 못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할아버지의 나라에 살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국 대한민국은 그 고려인의 후손을 외국인이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70)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187>

어떻게 고려인이 외국인입니까?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고려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려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8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고려인에게 누구도 조국 5천 년의 역사를 알려준 바 없지만, 고려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은 어렵פות한 조국 이야기만으로도 그들의 심장은 고려인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 고려인들이 고려인대회를 준비하면서 고려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무수한 벽이 있습니다.

1.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15개 국가로 편입된 고려인은 15개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2. 한반도 분단을 넘어야 합니다.
3. 한반도 문화, 중앙아시아 문화, 러시아 문화를 넘어야 합니다.
4. 80년이라는 시간의 벽도 넘어야 합니다.
5. 그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벽은, 조국 대한민국이 고려인을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로 규정한 벽을 넘어야 합니다.

고려인과 안산, 서울, 광주 위원회는 고려인 강제이주 사건을 희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려인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고려인대회 <함께 부르는 고려아리랑을>을(이하 고려인대회) 국민축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려인대회는 이렇게 합니다.

1. 고려인은 80년 만에 처음으로 고려인 80인 만민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고려인은 15개 국경을 넘어설 것입니다. 문화의 벽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인은 80인 선언문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2.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기념식을 합니다.

고려인 20명이 부르는 대한민국 애국가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가 정해지지 않아 식순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기념 공연을 합니다.

한국과 북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오래된 한인 공연단체이며, 고려인 강제이주 사건의 중심에서 고려인을 위로하고 함께했던 <고려극장>이 기념공연에 섭니다. 고려극장의 전설

의 디바, 고려극장 출신의 지휘자와 작곡가, 고려인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와 성악가, 그리고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합창단이 고려아리랑을 부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고려인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고 싶은 고려인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고려인들이 80년 만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나라에 살고 싶다”는 고려인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꿈!

2017년 9월 17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고려인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고려인대회

<함께 부르는 고려아리랑> 공동추진위원회 2017. 9. 4.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8-03

이주 고려인의 서울 정착을 위한 대책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8년 10월 26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